

DAEJEON SEJONG KNOWLEDGE PLATFORM



2022 겨울
통권 제83호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시민행복과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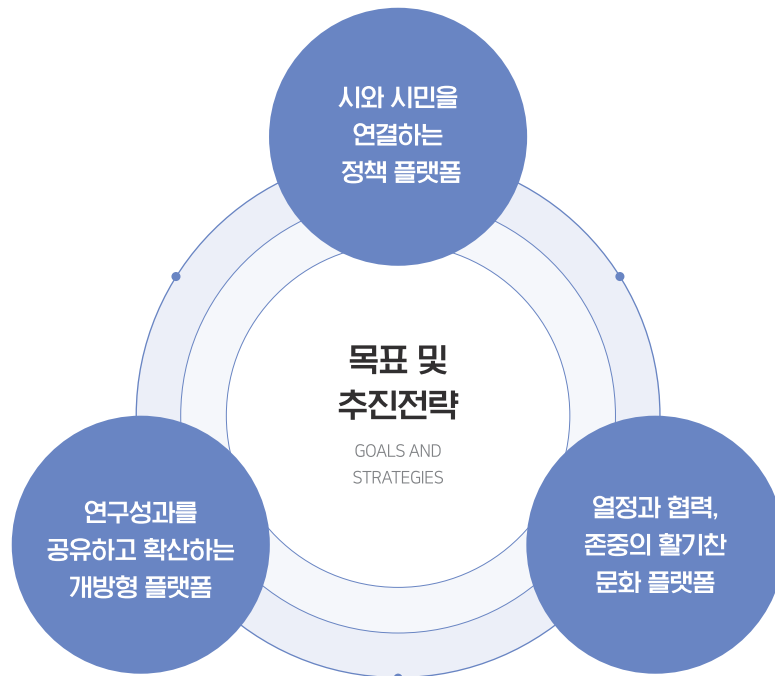
MISSION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VISION

시민행복과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플랫폼

- 디지털 전환의 시대, 도시 정책 연구
 - 아젠다 중심 정책 형성
 - 수요맞춤형 연구 개발



- 글로벌 도시 정책네트워크 확대
 - 초광역 협력네트워크 강화
 -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확보 및 조직 유연화
 - ESG 경영체계 확립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환경 조성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2022 겨울 통권 제83호

Contents

대전세종포럼 / 2022 겨울 통권 제83호



기획특집

- 08 대전광역시 민선8기의 복지정책 방향
양혜진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20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김길수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장
- 34 세종특별자치시 민선4기,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조주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 44 대전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전담특담

- ISSUE & TALK
- 62 무장애관광에 대한 이야기
오영진 베리어프리네트워크 대표
- 66 아래로부터 평화 만들기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회복적 대화-평화서클 진행자
- FOCUS_IN
- 70 청년복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대전청년내일센터
이해리 대전청년내일센터 정책기획팀 팀장
- 74 청년의 다양한 사이를 지원합니다
홍영훈 세종청년센터 센터장



대전과 세종의 소식

- 84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
UCLG 대전트랙을 마치며
장성재 대전세종연구원 국제협력담당
- 90 대전예술의전당과 세종예술의전당
최대원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사업본부장
- 94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
김현영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연구원 이모저모

DSI NEWS

- 100 연구원 뉴스

DAEJEON

논담(論談)

시민의 행복을 위한 대전·세종의 복지정책 방향과 과제

기 획 특 집 0 1

대전광역시 민선8기의 복지정책 방향

양혜진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 들어가며

지난 6월,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민이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이자 명품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민선7기 사업 중 민선8기 약속사업과 연동 및 통합, 즉시 적용, 폐지, 축소 등 가능 대상 사업 선정에 주력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제안을 보도하였다. 실천 가능한 대전광역시 정책 목표 제시 및 실현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의 날카로운 비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제안 등을 토대로 ‘미래전략 선도, 도시 경쟁력 제고, 시민우선 시정’이라는 시정방향을 확립하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향해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제 진흥,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 허브, 녹색환경과 교통 융합 행복도시,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 도시’라고 하는 5대 핵심전략을 내세운 5대 분야, 87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어느 정책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국가 및 지방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 중 시민들의 체감온도에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영역은 복지 분야가 아닌가 싶다. 하나의 정책이 들고 남에 따라 시민들은 자신의 기본적 욕구와 직결되어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인수위원회의 활동은 민선8기의 정책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적 자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 직원들의 현실적 분석,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정책현장 방문 및 대전시민이 바라는 대전 시정에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한 250건의 시민제안 접수 등의 노력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한 큰 틀을 다지고,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시정활동의 체계적인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활용하여 ‘시민우선 시정’이라는 시정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민선8기의 정책 추진전략 중 가장 특별한 것은 최소한 20년 후 대전의 ‘일류 경제도시’를 향한 그랜드플랜 수립이라는 약속과제를 제1추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 취임 후 단기과제, 4년 임기 내 중기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대전 그랜드플랜'을 통해 부문별 로드맵을 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2040 그랜드플랜'이라는 추진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또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에 적합하게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상생도시, 균형도시'로 분류되는 100대 핵심과제 중심의 추진전략을 내세우며 일류 경제도시를 세우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선8기가 제시하고 있는 5대 핵심전략 중 보건·복지 분야의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청년·여성 분야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 도시'라는 2대 핵심전략을 과연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상생도시, 균형도시'라는 추진전략 안에 어떻게 녹여 실현하고자 계획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 민선7기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민선7기에서 제시한 복지정책은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도시 대전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층별 복지일자리 창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 중장년·노인의 안정적인 삶 보장, 여성친화도시 대전 건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7개의 추진방향으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안정망 구축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시민건강권 확보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이라는 5대 분야를 통해 보건복지국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다. 민선8기 환경복지분과 위원들은 민선7기의 이러한 복지정책 수행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며, 장애인 지원을 위한 필요시설(센터) 준비가 미비하다.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돌봄취약인구 증가에 따른 전달체계가 필요하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에 따른 사업의 분절로 돌봄 욕구 대처가 미흡하다.

둘째, 공공재활병원 건립에 따른 벅스 상호사용은 복지부 권고에 따라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사례-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시 하나00어린이집으로 설치사례 있으며, 지원 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음), 향후 협약사항 등을 파악하여 조속한 검토를 통해 명칭 사용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보편적 복지수당으로 지원 판단되나, 이미 국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지원이 반드시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지원 효율성 근거도 없이 전 대상자에게 시비 100%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 사례라 판단되며 사업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국비지원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 매우 힘든 근무여건을 가지

고 있다. 교육, 휴가 등을 적시에 사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정책적 대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국공립시설 및 시센터 등 수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립 취지와 다른 기관(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전광역시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에 수탁되어 있어 각각의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환경복지분과 위원들은 민선8기에서 보다 우리 지역의 복지여건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 추진전략에 스며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담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노인인구가 2025년엔 전체인구의 20%인 약 1,000만 명, 2035년엔 약 1,500만 명, 2040년엔 35.3%인 약 1,7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급속하게 고령화 국가로 전환될 것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2040년 기준 노인인구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어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 및 장애인, 아동 등 돌봄취약인구 증가에 대비하는 지역사회내 돌봄 전달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인 중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아동 등은 커뮤니티케어 등 긴급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저출생 기조와 관련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결혼에서 아동 양육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2~12세까지 자녀들에 대한 양육, 교육,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새로운 정부정책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지원 등 역할 정립과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회관 운영은 지역복지 연계 효율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과도한 임대료 지출 등을 보완하는 비용 절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회관건립이 필요하다.

III — 대전광역시의 복지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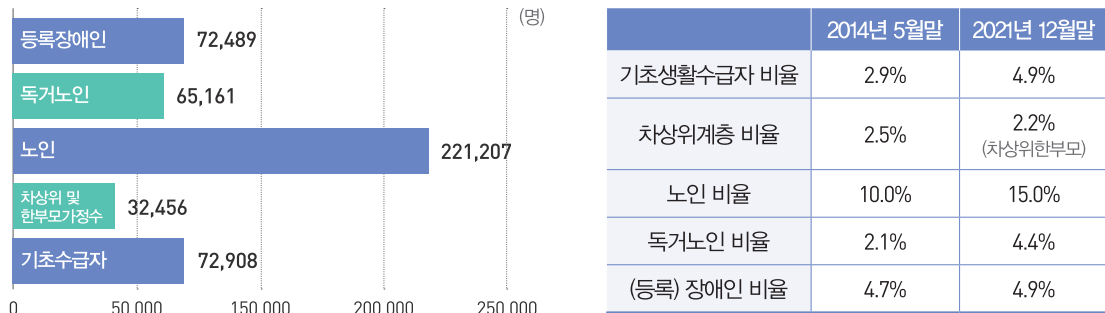
민선8기의 복지정책 방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민선7기의 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민선8기가 나아가야 할 현시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수요와 공급 체계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느냐가 4년 후 대전광역시의 복지정책의 성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분명 수요자인 시민들의 욕구는 불충족 수준을 넘어 사회문제로 확산될 것이며, 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

영해야만 하는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방정부가 붕괴되는 엔트로피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 도시’를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선8기의 핵심전략이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방향으로 적합한지, ‘상생도시’를 건립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요자의 환경적 자원체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마땅하다.

01 복지 수요 체계 : 복지대상 및 복지시설 현황

2021년 말 기준, 대전광역시의 사회복지대상자 현황을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72,908명으로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1,478,831명)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수급자는 32,456명으로 전체 2.2%, 노인인구는 전체 15.0%인 221,207명이며, 독거노인 인구는 전체 4.4%, 등록장애인은 72,489명으로 전체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5월 말 기준 대전시 사회복지대상자 현황과 비교하여 모두 증가한 비율이며 특히, 노인인구의 경우 5%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대상자 현황(2021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2022. 장애인구추계 시도편.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2022년 7월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에서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생활시설이 264개소, 이용시설이 485개소로 전체 749개소의 시설에 10,67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대상자별 시설 현황을 보면 노인시설이 전체 시설의 65.4%(490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장애인 시설 25.2%(189개소), 정신재활시설 4.0%(30개소)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활 및 정신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사회복지 대상자별 인구분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래 복지수요의 변화 여부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사회복지시설현황(2022년 7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계	노숙인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정신재활
계	749	9	6	21	490	189	4	30
생활시설	264	5	0	0	152	79	4	24
이용시설	485	4	6	21	338	110	0	6
기타시설	경로당 835, 노인교실 14, 노인보호전문기관 1, 푸드뱅크 11, 푸드마켓 10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22).

02 복지 공급 체계 : 복지예산 현황

2022년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아래 〈표 2〉와 같다. 총 1조 7,352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 6조 580억 원 중 28.6%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만으로는 1조 4,155억 원으로 시 예산 5조 3,668억 원 중 26.4%, 특별회계만으로는 3,197억 원으로 시예산 6,912억 원 중 46.3%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결과이며, 그 부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과가 가장 많은 46.8%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지 수요 체계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복지 대상자별 균형있는 발전 및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부서 예산 배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한 대응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대전광역시 22년도 보건복지국 예산(2022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 원

회계별	부서별(구성비)	'22년 본예산	'21년 예산	증감액(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1,735,250	1,676,803	9,128	4.3%
일반회계	계	1,415,475	1,372,636	52,490	4.0%
	복지정책과(27.5%)	387,708	401,271	△21,641	△6.0%
	노인복지과(46.8%)	648,976	603,719	45,256	7.5%
	장애인복지과(21.0%)	279,415	277,054	2,361	0.8%
	감염병관리과(2.2%)	43,261	36,727	△3,384	△11.8%
	건강보건과(2.3%)	52,555	51,135	1,419	2.7%
	식의약안전과(0.2%)	3,560	3,185	375	11.8%
특별회계	복지정책과	319,775	304,17	16,38	5.5%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2022).

03 복지 환류 체계에 기반한 복지 수요 전망

민선8기 인수위원회는 민선7기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복지전략 수립 및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이 2022년 현재 대전광역시의 복지수요와 비교하여 전망할 때 합리적 제안인지의 여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취약인구 증가에 따른 지원 등 미래 복지대전을 위한 ‘대전형 복지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수립 및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노인선도도시 대전’ 계획을 마련하고, ‘2~12세까지 아동의 안심 보육 및 교육 돌봄체계 구축’, ‘대전복지 미래전략 위원회 구성 운영’ 등 7대 사업 전략을 마련하여 미래 복지도시 대전광역시로 조성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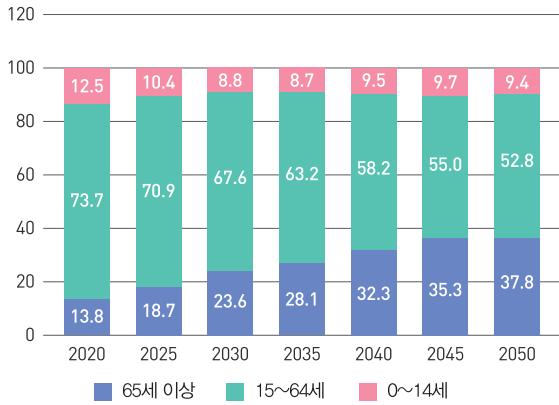
둘째, 인구문제 해결 및 결혼, 임신, 출산, 양육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우리 대전가서 결혼하자’ 인구종합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대전에서 청년이 결혼하여 대전에서 아이를 낳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지원 시책을 발굴한다. 대전의 인구정책으로 청년의 꿈과 아이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도시 대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셋째, 새로운 중앙정부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정책으로, 대전광역시의 대전현충원과 연계한 ‘호국메모리얼 파크 조성’ 및 ‘호국보훈 유공자 취업 플랫폼 구축’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시설 종사자 중 낮은 처우로 임금개선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민선8기 동안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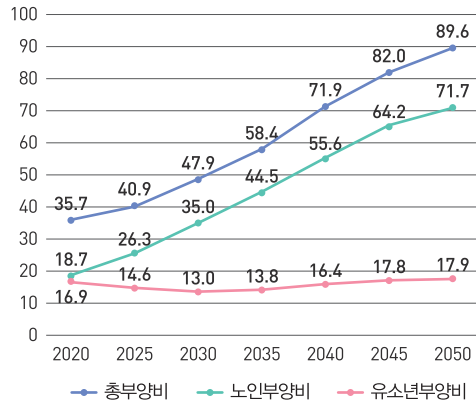
이러한 복지 환류체계의 내용이 2022년 현재 대전광역시 복지수요인 인구구조, 시민들의 복지욕구 및 MZ세대의 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인구규모는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 28.1%에서 2040년 32.3%, 2050년 37.8%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생산연령 인구인 15~64세 인구는 2030년 67.6%에서 2050년 52.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의 인구구조 전망에 따른 부양율 추이를 살펴보면, 노년부양비 및 총 부양비는 고령화의 여파로 평행적으로 증가하나 유소년부양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시킬 것이며,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민선8기 인수위원회가 제안하는 돌봄 취약 인구 증가에 대한 지원이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제안은 매우 합리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 유공자 및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한 제안 역시, 청년층을 겨냥한 보다 포괄적 복지 지원망을 구축하는 제안으로 점점 줄어드는 생산인구 유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MZ세대들의 특징인 현재의 복지여건에 따른 일자리 선택의 선호도를 생각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검토 내용으로 사료된다.

〈그림 2〉 대전광역시 인구구조 전망



자료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그림 3〉 대전광역시 인구구조 전망에 따른 부양율 추이



주 : 1)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
 2) 유소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 * 100
 3) 노년부양비=(65세 이상)/(15-64세 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IV — 민선8기의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주요 특징 및 내용

민선8기 복지분야 약속사업의 주요 특징은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 도시’라고 하는 2가지 시정전략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먼저, 365일 24시 돌봄과 인재육성에 대해 민선8기 대전시정의 중점 과제이자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전략 중 하나가 ‘아이 기르기 좋은 대전’이다. 기존의 보육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취약점을 보완하여 임신·출산, 영유아·아동 양육, 건강관리 확대 등 통합 관리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대전을 찾게 하자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보건 웰빙도시와 관련해서는 대전미래전략의 도시경쟁력 근간은 안전과 보건의료 부문의 건강관리에 기반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건설·건축안전 관리, 재난관리체계 등 부문별 안전 관리 체계를 상시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춤춤 보육시스템’, ‘고령친화도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라는 4개의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인 23개의 정책과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 민선8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과제 : 약속사업을 중심으로



자료 : 민선8기 100대 핵심과제 실천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2022. 10)

01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청년·신혼부부 등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사회초년생의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제시한 첫 번째는 대전형 청년주택 보급 확대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LH 등 중앙정보의 도움으로 수행하고자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본 정책과제에서는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주거형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담아 수요자에 맞는 주거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대학 협력 기업유치 및 창업공간 조성을 통

해 학령인구 감소 및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새로운 대학 생태계를 구축하며, 지역의 경제·산업·문화발전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돕는 정책이다. 청년 지역금융 지원체계 강화 정책 역시 청년의 관점에서 구축되는 플랫폼으로 청년들의 금융안전을 지원하며, 만 19~30세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연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여 청년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전의 노후화를 예견한 2040 그랜드플랜의 가장 중요한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미래도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기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02 촘촘한 보육시스템

민선8기에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촘촘한 보육시스템을 통해 상생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확립하는 데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보여진다. 성장단계별 안심돌봄, 공동체 육아·보육,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맞춤형 성장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13세 아동을 대상으로 미래희망 성장 사다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걱정없는 양육환경 조성,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기반 마련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보편적,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 보육교육 실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친환경 급식개선 등을 통해 성장하는 아동들의 건강증진 및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 지원의 효과를 기대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가사 지원 서비스 추진 등 일·가정 양립 제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동 대상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인구유출 및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국제화센터 설립 사업의 경우 대전시의 오래된 지역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외국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균형 발전을 통한 상생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정책 반영의 그림으로 보여진다.

03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공약 내용을 근간으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연구 후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실행하여 2040 그랜드플랜을 반영한 노인이 안전하고 살기 편한 도시, 행복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자 친화 도시 조성으로 일자리, 사회참여 활동이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을 기대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대상 및 수행기관(위탁운영) 확대를 공약으로 노인 돌봄대상 및 시설(기관) 확대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민선8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24년 1개소, 26년 1개소를 총 2개소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4년까지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증대를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령친화도시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노인들의 교통비 부담 해결을 통한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추진 계획과 노인들의 여가와 생활에 기본 환경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공기순환기 보급과 관련된 지원 확대 및 운영지원비 인상을 통해 노인 여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홀로 거주하는 취약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안전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독거어르신 스마트위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GPS기능으로 치매·발달장애 어르신 실종 및 사고를 예방하고 취약노인의 건강·운동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04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마지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관련한 공약내용을 달성하려면 장애인 등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상별 통합돌봄서비스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와 연계추진해야 하며, 이 사업 역시 2040 그랜드플랜의 일환으로 기반기축(2023~2025), 사업확대(2026~2028), 정착단계(2029~2032)를 위해 2022년 10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완료 과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확충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역시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의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및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시민사회 구축을 목적으로 제시된 다문화 인터넷 방송 시설 구축 사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자녀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및 교육제공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공약 내용으로 계획된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은 다문화 자녀들의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온라인 수업 개설 등 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진행될 것이다.

여성·가족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 개발·추진과 젠더갈등 해소 등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대상 교육 체계화를 공약 내용으로 제시한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확산 체계적 추진의 경우 부부초년생, 가족, 연인, 청년 등 특화된 통합교육 프로젝트, 편의성 있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양성평등 화장실 구축, 남성대상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예술체육에 평등을 입히다’라는 관련분야 네트워크의 융복합 시스템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 발생시 신속, 대응·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safe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 안심 화장실 확대 설치 사업과 청년 부상제대군인과 청년 보훈유공자·의사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 부상 제대군인·보훈유공자 등 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및 호국보훈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다.

V — 나오며

지금까지 민선8기 복지분야 주요 약속사업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번 대전광역시 복지분야 약속사업은 현 지방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으로서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대전 그랜드플랜’ 수립이라는 약속과제 추진을 위한 제1 전략을 담보하기 위해 장착되는 하드웨어 구축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동안의 정책들이 복지대상자들의 복지현안을 구석구석 살펴서 세세하고 민감하게 해결해주는 실천적 복지였다면, 이번 민선8기의 복지는 대전의 ‘2040 그랜드플랜’ 속에서 정책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지원시스템으로서 ‘대전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제대로 기능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복지수요 전망을 통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민감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정책들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확장하기 위한 체계간 상호작용을 위한 자원활

용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간에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각각의 유용한 자원들간 연합·융합시스템을 통하여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하나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 등 다각적인 사회 내 각 체계들이 통합적이고, 접근 용이하며,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책임성이 명확하게 확보된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제시된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2022. 6). 환경복지분과 활동 보고서.
- 대전광역시(2022. 7). 보건복지국 통계.
- 대전광역시(2022. 7). 민선 8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 대전광역시(2022. 9). 민선 8기 공약사업 세부 실천계획(안).
- 대전광역시(2022. 10).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실천계획.
- 통계청(2022). 202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기 획 특 집 0 2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

김길수 / 굿네이버스 충청지역본부장

1 — 서론 :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위인 중 어린이와 관련된 위인은 당연 소파 방정환 선생이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티 없이 맑고 순수하며 마음껏 뛰놀고 걱정 없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민지 지배였던 당시, 그러한 생각과 달리 어린이들은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보호받거나 존중받지 못했다. 농사일이나 집안일을 돕느라 교육을 받기가 어려웠고, 어린이의 의견은 쓸데없는 말로 여겨지곤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외쳤다. 100년 전 어린이날, 서울 거리를 아이들의 행렬로 가득 채우고, 어른들과 아이들을 향한 당부의 외침은 어린이날의 시초가 되었다. 초기의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마냥 즐겁게 뛰어노는 날’이 아니었다. 어린이가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한 명의 어엿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만든 날이었다.

하지만 광복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며 현재는 “아이들이 올바르게 씩씩하게 자라길 바라며 어린이에 대한 애호 사상을 널리 알리자”라는 취지의 기념일이 되었다. 2022년 5월 5일은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를 위한 날이다. 각 지역에서는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진행되었고, 공원과 놀이동산 등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을 삼갔던 가족들이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몰려 나왔다. 이렇게 전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었던 100주년의 어린이날이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 사회는 100년 전 어린이가 완전한 인격체로 존중받기를 원했던 소파 방정환 선생의 당부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가 비준(1991.11.20.)한 지 31주년이 되는 대한민국의 현재,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

동권리는 충분히 보장을 받고 있는지 또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지 등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통계(2021) 중 학대행위자의 83.7%가 부모로 여전히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처럼 책임성 있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발달단계 상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생애에 걸쳐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가족 및 사회 그리고 개인의 기능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아동의 나이, 지속 기간, 학대 수준, 고의성, 위협이 강압의 정도 등에 따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요하는 사안이다. 즉,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아동보호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에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방향 제시 등 정부 및 지방정부에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 아동학대 현황

01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53,932건으로 20년 42,251건 대비 27.6% 크게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¹⁾ 또한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96.6%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였다.

〈표 1〉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단위 :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신고건수	34,169	36,417	41,389	42,251	53,932
국내 신고건수	34,166	36,416	41,389	42,247	53,928
해외사례	3	1	0	4	4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30,923	33,532	38,380	38,929	52,083
학대 판단건수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1)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하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아동학대사례는 전년 대비 21.7%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관수는 2017년 60개소에서 2021년 77개소로 17개소 증가하였다.

〈표 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 건, %, 개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아동학대사례	건수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증가율	19.6	10.0	22.1	2.9	21.7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수	60	62	67	71	77
	증가 기관수	1	2	5	4	6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7년부터 중복학대와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학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개년 연속 중복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 연도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2,367	24,604	30,045	30,905	37,605
중복	10,875	11,792	14,476	14,934	16,026
신체	3,285	3,436	4,179	3,807	5,780
정서	4,728	5,862	7,622	8,732	12,361
성	692	910	883	695	655
방임	2,787	2,604	2,885	2,737	2,793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약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2021년에는 31,486건으로 전체의 83.7%의 비율을 보이면서 전년도 25,380건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 3,609건(9.6%), 친인척 1,517건(4%), 타인 658건(1.7%), 기타 355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단위 : 건,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22,367(100)	24,604(100)	30,045(100)	30,905(100)	37,605(100)
부모	17,177(76.8)	18,920(76.9)	22,700(75.6)	25,380(82.1)	31,486(83.7)
친인척	1,067(4.8)	1,114(4.5)	1,332(4.4)	1,661(5.4)	1,517(4.0)
대 리 양 육 자	3,343(14.9)	3,906(15.9)	4,986(16.6)	2,930(9.5)	3,609(9.6)
부모의 동거인	247(1.1)	270(1.1)	363(1.2)	444(1.4)	403(1.1)
유치원 교직원	281(1.3)	189(0.8)	155(0.5)	118(0.4)	140(0.4)
초중고교 직원	1,345(6)	2,060(8.4)	2,154(7.2)	882(2.9)	1,089(2.9)
학원 및 교습소	217(1)	176(0.7)	320(1.1)	208(0.7)	319(0.8)
보육교직원	840(3.8)	818(3.3)	1,384(4.6)	634(2.1)	1,221(3.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85(1.3)	313(1.3)	408(1.4)	556(1.8)	217(0.6)
기타시설 종사자	60(0.3)	27(0.1)	63(0.2)	12(0.0)	93(0.2)
청소년관련 시설 종사자	32(0.1)	33(0.1)	87(0.3)	14(0.0)	58(0.2)
위탁부	4(0.0)	7(0.0)	3(0.0)	4(0.0)	6(0.0)
위탁모	17(0.1)	2(0.0)	8(0.0)	16(0.1)	17(0.0)
베이비시터	15(0.1)	11(0.0)	41(0.1)	42(0.1)	46(0.1)
타인	294(1.3)	360(1.5)	663(2.2)	565(1.8)	658(1.7)
기타	441(2)	304(1.2)	364(1.2)	369(1.2)	355(0.9)
파악안됨	45(0.2)	-	-	-	-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또한, 2021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5.02% 전년도 대비 1%p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5〉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피해아동 발견율	2.64	2.98	3.81	4.02	5.02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4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약 0.15%이다. 2020년 43명에 비해 3명 감소하였으며, 1세 미만이 13명(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아인 만 2세 이하 연령대는 19명(47.5%)으로 영아가 피해아동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표 6〉 연도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망자 수	38	28	42	43	40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02 시도별 아동학대 주요 통계

2021년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의 경우, 경기도 13,578(26.1%), 서울특별시 6,137건(11.8%) 순으로 높았으며, 낮은 순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259건(0.5%), 광주광역시 1,038건(2.0%)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1,645건, 2021년 1,637건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9년 380건, 2020년 371건, 2021년 25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21년 아동학대 총 신고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단위 : 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36,920	38,929	52,083
서울	3,353	4,167	6,137
부산	2,302	2,112	3,035
대구	1,887	1,719	2,013
인천	3,033	3,099	3,720
광주	1,089	858	1,038
대전	1,212	1,645	1,637
울산	913	1,402	3,114
경기	9,977	9,192	13,578
강원	1,836	1,404	1,508
충북	1,402	1,288	1,565
충남	1,863	2,374	2,793
전북	1,993	2,453	2,540
전남	2,453	2,368	2,481
경북	2,209	1,875	2,702
경남	1,519	1,743	2,848
제주	959	859	1,115
세종	380	371	259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추계 아동 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21년 피해아동 발견율은 5.02%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14.68%, 전라남도 7.71%, 전라북도 7.62%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서로는 세종특별자치시 2.60%, 서울특별시 3.11%이다.

대전광역시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3.72%(전국 3.81%), 2020년 5.9%(전국 4.02%), 2021년 5.20%(전국 5.02%)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9년 3.85%(전국 3.81%), 2020년 4.2%(전국 4.02%), 2021년 2.60%(전국 5.02%)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아동 인구가 많고 관할 지역의 범위가 넓을수록 현장과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관당 사례수가 많을수록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피해아동 및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아동 인구나 관할 면적, 사례 당 평균 이동 소요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상담원 충원이 필요하다.

〈표 8〉 시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총계	30,045	3.81	30,905	4.02	37,605	5.02
서울	2,178	1.74	2,780	2.3	3,615	3.11
부산	1,752	3.88	1,558	3.6	2,022	4.75
대구	1,479	4.02	1,271	3.6	1,507	4.43
인천	2,282	4.98	2,427	5.4	2,761	6.36
광주	876	3.46	698	2.9	827	3.52
대전	895	3.72	1,363	5.9	1,147	5.20
울산	800	4.11	1,234	6.5	2,669	14.68
경기	7,885	3.57	7,669	3.5	10,207	4.75
강원	1,523	7.05	1,153	5.5	1,160	5.65
충북	1,171	4.72	1,025	4.2	825	3.51
충남	1,448	4.19	1,940	5.7	2,011	6.12
전북	1,720	6.30	2,086	7.9	1,937	7.62
전남	2,014	7.59	1,909	7.5	1,942	7.71
경북	1,782	4.70	1,450	4.0	2,068	5.79
경남	1,300	2.39	1,443	2.7	1,944	3.81
제주	645	5.48	562	4.8	747	6.47
세종	295	3.85	337	4.2	216	2.60

자료 :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III — 맺음말 :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필자가 근무하는 굿네이버스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힘써왔고 이런 노력이 기반이 되어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국가차원의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체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으로 위탁 운영되면서 아동학대 발견, 보호 및 치료, 사례관리 등의 아동학대 개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포용 국가 아동정책(2019.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0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2021.8) 등을 발표하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강화된 현 시점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보호체계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에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01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야 하나, 둘 이상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대다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77개소로 전국 226개 시군구의 33%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개정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과 종사자 충원은 신고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아동학대 신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7개소 증설에 그치는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므로, 아동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평균 3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할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 평균 사례관리 수는 64건으로 보건복

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32건,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20건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다.

아울러 2021년 우리나라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천 명 당 5.02명으로 미국 선진국 해외 기준 8.4명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내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증진 시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피해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해 심각한 학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지난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021.8)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상담원의 확충은 포함되지 않아 추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확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는 급하게 보완적 대책(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면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 통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 2021년 말 기준 5개구 중 2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하반기 1개소 증설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1개소 설치되어 있다.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는 각각 4개소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선도적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아동학대 대응에 있어 신속성과 접근성, 서비스의 충분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재학대 악순환은 끊을 수 없으며, 결국 이에 대한 선결 과제는 물적(아동보호전문기관), 인적(종사자) 인프라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 평균 사례관리 수는 64건으로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32건,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주요하게 참조하는 미국의 권장인 17건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다. 더욱이 사후관리까지 포함할 경우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사례 수가 배가 되는 상황으로,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은 서비스의 지연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월평균 221시간(법정 근로시간 174시간)으로 47시간을 초과 근로하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심의선·최정민, 2019).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률은 34.4% 매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동권리보장원, 2021). 또한 상담원 평균 근속기간은 3.4년 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력을 제고하는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상담원 인건비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87.4% 수준이므로, 과도한 업무량에 비하여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금의 부족분은 위탁 법인 내에서 충당하거나, 아님 보조금 내에서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법인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1년부터 추가적으로 10명의 임시 인력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사례수가 미국 권고 기준 약 2배이기 때문에 상시적 인력으로 충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20건 이내의 적정 업무량으로 조정하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동일 임금 동일 처우로 개선하는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3) 즉각 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보호시설 확충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20.7)’을 통해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로 분리·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2021.3)’가 시행되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비교했을 때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넓게 규정한 것이며, 보호시설 인도 기준 역시 명, 상흔 등 외관상 신체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의료진에 의한 신고의 경우 등으로 완화시킨 내용으로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아동학대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호시설 확충 없이는 즉각 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의 2021년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는 98개소이며, 2022년까지 141개소(43개소 증설)까지 추가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바, 즉각 분리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시설의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 중에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의 부재에 따라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등의 신규 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대전광역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2021년 말 기준 4개소이며, 세종특별자치시는 2개소이다. 정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적정 규모 산출 및 단계적 확충 추진(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최소 2개(남·여) 설치)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증설 예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최소 2개소 이상 확충이 요구된다. 또한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만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으로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정부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면책규정 마련

국가 및 지자체는 법에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가진다.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신고·조사 및 응급보호 업무와 피해아동 보호, 치료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대응인력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 면제를 규정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국회 심의 중이지만, 공공의 조사와 민간의 사례관리로 이원화된 체계 하에 면책규정은 공공 인력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 대응 인력에게도 동일하게 준용되는 면책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5) 아동학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법 개정 및 보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며(정보공개법 제3조), 다만 정보공개법이 특별히 정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에 해당하여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비롯한 지자체, 학대행위자 및 보호자, 피해아동, 신고자 등의 정보공개청구가 증가 추세이다. 가해자인 학대행위자나 부모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라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 등 공개회의 등에서 피해아동과 관련된 정보가 활용되거나 특정단체 및 언론에 무분별하게 제공·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취급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보의 공개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 사례관리 업무 명문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아동복지법 제46조)는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상담·치료·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그 밖의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는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관 설치 시 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인 심층 사례관리와 그에 따른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상 명문화해야 한다. 즉, 고도화된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는 ‘심층 사례관리’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로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중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례관리와 혼용 또는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02 재발방지 및 회복 지원 강화

1) 사례관리 거부 시 지자체의 업무협력 강화

재학대 발생율이 11.4%(2019년) → 11.9%(2020년) → 14.7%(2021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사례 10명 중 1명은 재학대 피해 사례인 것이다.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례의 경우 학대의 강도 또는 빈도가 강해지거나 혹은 행위자 및 보호자의 개입거부가 지속되는 등 아동가정에 대한 개입 또는 모니터링 조차 불가할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 절차를 준수한 이후 지자체에 최종 개입거부 통보(서)를 취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학대행위자 및 보호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에 따라 피해아동의 안전 확인 및 서비스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못하고 재학대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거부·방해 시 지자체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의식 고취 및 법적·행정적 적극 대응으로, 사례관리 불이행 통보서 수신 후 지자체의 행위자 설득 및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우선 조치하고 최종 과태료 부과 조치 등 업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2)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법제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 가정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적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사례관리를 수행하려고 해도 학대행위자가 거부할 경우 개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업무 수행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례관리를 거부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재 규정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방지를 도모하고 사례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부과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개정 2020년 12월 29일/시행 2021년 6월 30일). 즉, 사례관리 법제화를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성공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바통터치 체계 구축

사례이관 회의는 조사 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이관 시 사례 전반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며 이는 가족의 변화를 통해 회복을 돕는 심층사례관리의 핵심이다.

사례이관 회의를 공식화하여 경찰 및 지자체의 개입 히스토리, 위험사정 프로파일, 안전여부, 욕구 및 변화의지 등을 공유하고 합동 초기대면(가정방문)을 계획한다. 합동 초기대면(가정방문_가족팀 회의)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족 주도의 의사 결정방식으로 서비스에 대한 가족의 욕구 사정 및 가족 중심의 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이관 회의 및 가족팀 회의를 공식화하여 성공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바통터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 내부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드림스타트의 슈퍼바이저 자격검정 과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공 슈퍼비전으로 첫 제도화가 되었고, 드림스타트의 슈퍼비전은 2009년부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실행해 왔으나 제도·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적임에 따라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슈퍼비전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0년 40명, 2021년 80명, 2022년 125명, 2023년 175명, 2024년 229명의 슈퍼바이저 양성교육이 진행 중이다.²⁾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공적인 사례관리는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내부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완성된다. 이를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슈퍼바이저 양성 및 슈퍼비전 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03 아동학대에 대한 대국민적 인식개선 필요

대다수의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면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돼서 때렸는데 이게 학대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이라고 말하며 학대행위가 아닌 훈육차원이었다고 학대 행위를 합리화한다. 현재의 부모는 어린 시절 어느 정도 체벌이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굿네이버스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부모님 혹은 성인 가족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아동의 23.9%가 체벌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에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이 삭제된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가하는 체벌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했다. 즉,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62번째로 명실상부한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다.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각 민간단체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알리

2) 슈퍼바이저 기본교육 1~5단계(100시간) ▶ 심화교육(실습·과제·평가, 30시간) ▶ 심의(전체 3년 과정)

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으나 부모들은 변화된 아동보호정책에 적응하지 못해 여전히 자신도 모른 채 일상 속에서 학대행위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훈육을 가장한 아동학대가 중단되기 위해 위해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부모교육 등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국민적인 아동학대 인식개선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또한 사후 개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굿네이버스(2015),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 굿네이버스(2018),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 굿네이버스(2018)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 굿네이버스(2019), <아동보호체계 재편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응 현황 및 과제>
- 굿네이버스(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 굿네이버스(2021), <아동 재난 대응 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2019.5), <포용국가 아동정책>
- 관계부처합동(2020.7.),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안)>
- 관계부처합동(2020.8.),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 관계부처합동(2021.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2021.8),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 보건복지부(2019, 2020,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5.4.), <100회 어린이날, “우리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 심의선 · 최정민(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직장 행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연구>
- 경인일보(2021.10),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직률 60%’ 전국평균 2.1배>
- 뉴스이엔티(2022.05), <아동보호전문기관 3명 중 1명 퇴사... 아동학대 최일선이 무너지고 있다.>
- 베이비뉴스(2022.5), ‘아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굿네이버스)
- 조선일보(2021.1), <줄퇴사하는 아동학대보호기관 상담사... 아동학대 감시망 뚫린 이유>

기 획 특 집 0 3

세종특별자치시 민선4기,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조주환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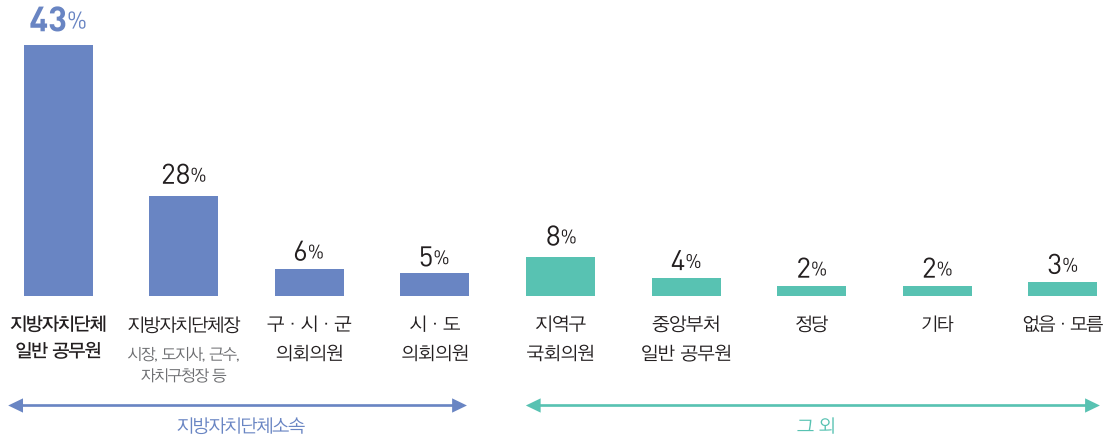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세종특별자치시는 민선4기를 시작하였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1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을 돌아보면 성과도 있었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시장을 선출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많이 발전한 것이다. 특히, 2020년 1월 14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공직선거법 제15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2020년 4월 15일에 개최된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선거권의 나이 기준을 하향한 나라들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자치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일부 이뤄졌다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간 중단되었다가 1991년 7월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7년 6.29선언에서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지방자치 실시 발표와 같은 해 10월 헌법 개정, 그리고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부활을 위한 토대¹⁾가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로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이 목적이다. 이렇듯 지방자치의 포괄적인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²⁾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아래 결과로 알 수 있다.

1) 금창호(2015),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콘텐츠기획과, p. 116.

2) 정인(200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전 배재대학교, p. 10.

지역에서 문제 발생 시,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자료 : 김진주(2022), "지방자치 필요성 공감하지만... '주민투표·감사청구·소환 경험 없다' 79%", <한국일보>, 2022.05.21 04:3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104000522>

지역 내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82%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를 찾아가겠다고 응답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 일반공무원, 정당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과 비교했을 때 약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주민에게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되었고 그만큼 지방자치가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³⁾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 지방자치 31주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주년을 맞은 민선 4기 역시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 목적이라는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공약과 지난 10월 4일 열린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 및 포럼'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4기 공약, 공약총괄표(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시장실) ———

01. 실질적인 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 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다. 디지털 미디어센터(DMC) 조성

02.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가. 주택청약제도 개선
- 나.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 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 라. 부동산 3중 규제 재검토

3) 김진주(2022), "지방자치 필요성 공감하지만... '주민투표·감사청구·소환 경험 없다' 79%", <한국일보>, 2022.05.21 04:3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81104000522>

03. 시민들이 잃어버린 20분 교통체계의 전면개편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가. 교통체계의 전면 재검토
- 나. 광역지하철망 조기착공
- 다. 저상버스·누리콜택시 확대
- 라.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 마. 택시 대폭 증차 추진
- 바. 초등학교 앞 Drop-Zone 설치

04. 소상공인 경영난 회복을 최우선 지원하겠습니다.

- 가. 기존상권 최대보호
- 나. 요식업소 서빙로봇 지원
- 다. 여민전 발행 대폭 확대

05. 청년일자리가 풍부하고 성공창업이 보장되는 경제수도를 만들겠습니다.

- 가.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 나.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
- 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액 확대

06. 세종을 한글문화의 중심도시로, 문화·예술·관광의 핫플레이스로 만들겠습니다.

- 가. 한글문화수도 세종 건설
- 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07. 어린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수준 높음 미래형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가.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
- 나.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 다. 우수인재 시비 유학제도 신설
- 라. 여민전 에듀 포인트 신설
- 마.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
- 바. 직장맘 애로사항지원 센터 설치
- 사. 직장어린이집 확대 지원
- 아. Non-GMO 친환경급식체계 구축

08. 행정수도 및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국립 중입자가속기연구·의료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 가. 중이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 나.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트화(과학비즈니스벨트)

09. 어르신이 편안한 노인친화도시, 수준높음 의료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가. 야간·응급진료 시스템 구축
- 나. 가가호호 방문 진료서비스
- 다. 건강관리 스마트시계 공급
- 라. 어르신 간부제도 시행

10. 시민의 '소확행'에 세세한 손길이 미치는 선진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가. 뉴빌리지 정주환경 정비
- 나.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
- 다. 주택관리 노동자 인권향상
- 라. 반려동물 위탁 바우처 지원

지난 10월 4일 미래전략수도 비전 선포를 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시정 4기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미래전략수도로써의 세종 완성을 위한 5대 추진 목표와 20개 세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은 5대 추진 목표로 자족경제도시, 문화예술도시, 의료복지도시, 교육특구도시, 한글사랑도시를 내세웠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족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스마트시티 조성, 컨벤션 산업도시 육성정책이 추진된다.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금강수변을 관광문화 콘텐츠화 하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중부권 최고의 정원 관광도시 조성, 지역출신 예술가를 동기(모티브)로 한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의료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추진,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건립, 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대상별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현재 109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160곳으로 늘리고, 돌봄복지 시설도 현재 20곳에서 2026년까지 27곳까지 늘린다.

‘교육특구도시’ 조성을 위해서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국정과제에 맞춰 세종형 교육특구 도시를 조성하고, 대학세종캠퍼스를 통해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유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단독 캠퍼스를 추진한다.

‘한글사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글문화단지 조성, 세종문화관 조성, 4대 상징문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2022년 10월4일, 세종컨벤션센터 미래전략수도 비전 선포식)

지난 8월에 있었던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을 보면,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의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정책특별보좌관 위촉 분야를 보면 경제, 농업, 청년, 문화, 안전, 언론, 대외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의 목적도 명확히 제시되었다. 시정 4기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이 뜻은 최민호 시장의 당선으로 알린 우리 세종시민들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시민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공약과 비전선포식,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에서 청년, 어린이, 여성, 어르신들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든다. 청소년 참정권으로 시작하는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가 향후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취임 100일을 얼마 전에 넘긴 세종특별자치시 민선4기, 오늘과 내일의 희망이요 기동인 시민청소년 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안코자 한다.

청소년들에게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미래세대’. 유사어로는 ‘꿈나무’, ‘미래의 주역’ 등이 있다. 미래세대라는 말은 청소년을 현재 사회에서 삭제시키는 말이기도 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인력에

가깝다는 이미지를 전달해 현재와는 관련이 적은 세대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⁴⁾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 정책을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 그리고 아직은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보호에 맞춰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지금 여기에서 성장한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유입과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세종통계포털에 의하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2012년 12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인구 113,117명 중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20,373명(전체인구의 18%)이었다. 출범 5년 후 2017년 12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280,100명 중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50,364명(전체인구의 17.9%)이었다. 10년 후 현재 2022년 9월 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인구 381,925명 중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1,646명(전체인구의 18.7%)으로 전체 인구는 출범한 해 2012년보다 3배 이상 인구가 늘었으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인구의 비중은 5분의 1을 밑돌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목표로 '지역중심 청소년 성장 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 자치 활성화'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2022년 10월 25일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세영박사 강의 자료). 아마도 그 동안의 청소년기본계획이 보완되고 현실에 맞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2018년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보완과 발전에 방향성을 두고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에 이미 제시된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2018년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12개 중점과제 '청소년참여확대', '청소년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체제 강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제고'로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혁신⁵⁾ 등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9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차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2019~2023)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차원에서 청소년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였다. 비전으로 행복한 시민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세종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세종', '청소년이 존중받는 세종',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종', '청소년정책을 선도하는 세종'이라는 4대 정책목표로 국가 청소년정책에 부합하며 시민청소년이라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4) 진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1. 8. 13),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https://yhrjeum.kr/activism/?q=YToyOntzOjE5OiJrZXI3b3JkX3R5cGUlO3M6MzoiYXs5IjtzOjQ6InBhZ2U02k6ODI9&mode=view&idx=7517041&t=board>

5) 관계부처합동(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48

국가의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16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지방자치의 하나의 영역인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고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참여의 길도 열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18세 미만(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만들었다. 하지만 아래 조례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기회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에 머물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6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선정을 거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2. 4. 20.>
2.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신설, 2022. 4. 20.>
3.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2. 4. 20.>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 4. 20.>

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해당 읍·면·동에 체류지를 둘 것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 및 교류활동(개정, 2017. 7. 20.)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신설, 2017. 7. 20.)
5.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 등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자문 등을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Roger Hart의 참여사다리(Hart, 1992 '참여사다리' 8단계)에 의하면 비참여(①조작(조정)당함 → ②장식품 → ③명목상의 참여), 참여(④결정한 후, 청소년에게 통보함 → ⑤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보함 → ⑥어른의 주도로 청소년과 함께 결정 → ⑦청소년이 주도하고 관리함 → ⑧청소년의 주도로 어른과 함께 결정)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Hart의 참여사다리 8단계로 봤을 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③명목상의 참여 ④결정한 후, 청소년에게 통보함 ⑤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보함 등 비참여와 참여의 수준이 낮은 사이를 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2020년 1월 14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선거 등 공직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공직선거법 제15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2020년 4월 15일에 개최된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되었다. 21대 총선 결과 만 18세 유권자는 전체 국민 투표율 66.2%보다 조금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⁶⁾ 만 18세 유권자 54만 명 중 67.4%(남 63.3%, 여 71.8%)가 첫 투표권을 행사하며 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청소년은 정치참여에 있어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물론 비유권자인 청소년의 정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현장을 보면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와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1998년 10월 25일 선포한 위 청소년현장은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전환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새로운 청소년 현장을 선포하였던 이유는 지금까지 청소년을 주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미래의 주역으로 인식하여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제한하여 왔기 때문이며, 청소년현장 선포를 통해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⁷⁾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지방자치의 미래는 청소년이다.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인권을 가지고 보다 평등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소년은 인적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성장의 동력인 청소년이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박준석(2020. 11. 22), "4.15 총선, 60대 투표율 80% 찍고도 '보수정당' 완패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6550001682>

7) 지혁진, "학교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인권문제,"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2, 부산, p. 4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등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업무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이상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해진 정책에 의견수렴과 자문 정도의 수준인 것을 Hart의 참여사다리 ⑦청소년이 주도하고 관리함과 ⑧청소년의 주도로 어른과 함께 결정까지 갈 수 있는 청소년참여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영향을 주는 오늘과 내일을 스스로 만들고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공적 영역의 공공문제나 지역사회 단위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공적 영역은 사회적 영역과 국가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적 영역에 있어 참여는 정책참여, 선거참여, 정책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등과 같은 정치참여이고, 사회적 영역에 있어 참여는 봉사활동,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참여, 수련시설 운영참여 등”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기구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실제 인지도 및 활동경험은 11%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72.6%가 긍정적인 답변⁹⁾이 나왔다고 한다. 참여권이 보장될 수 없는 방해요인으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0.7%, 29.2%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 24.2%가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12.7%는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순으로 보고되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¹⁰⁾고 한다. 아직도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성숙한 존재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은 입시위주의 성장과정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직접적으로 참여·제안·결정할 수 있는 장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기본 정보 등을 제공하고 청소년 참여를 명시하여 청소년 참여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 운영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곳에서 삶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청소년 참여의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자문과 의견수렴이 아니라 정책 과정과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8) 김영인. (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p. 104.

9) 김영지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p. 504.

10) 상동, pp. 504~505.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8세 선거권 하향으로 주어진 참정권과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서 청소년의 지방자치 정책에 참여 기회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올바른 권리 행사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수혜자 측면이 아닌 이제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공급자로서의 정책 이해와 문제 찾기, 해결 등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올바른 수행을 통하여 시민 청소년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 금창호(2015),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콘텐츠기획과.
- 김영인(2007), 청소년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참여경험과 시민성 변화. 청소년학연구, 14(6), 99-127.
-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준석(2020. 11. 22), "4.15 총선, 60대 투표율 80% 찍고도 '보수정당' 완패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6550001682>
- 정인(200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지혁진(2002), "학교를 중심으로 본 청소년 인권문제."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진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1, 8, 13),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니다", <https://yhrjjeum.kr/activism/?q=YToyOntzOjE5OjRZl3b3JkX3R5cGUlO3M6MzoiYWxsIjzOjQ6inBhZ2UjO2k6ODt9&bmode=view&idx=7517041&t=board>

기 획 특 집 0 4

대전광역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¹⁾

양성욱 /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I — 연구배경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이 가장 높은 나라로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2004년 이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최명민 외, 2019)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4.6명(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의 최근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평균인 11.0명보다 2.2배 높은 수치로(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118) 지속적인 대응이 무색할 만큼 자살 사망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자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네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다부문적인 자살예방 전략, 둘째, 자살수단의 접근성 제한, 셋째, 정신과적 문제나 알코올 남용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의 조기 발견과 관리, 넷째, 자살 취약계층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WHO, 2014; 김정수 외, 2017 재인용). 이 가운데 일본 영국 등 몇몇 국가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지지체의 역할과 그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WHO 역시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다(Caan, 2013; Nakanishi et al., 2015; Torjesen, 2013; 김정수 외, 2019 재인용). 즉,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가 자살예방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송인한 외, 2016).

1) 본고는 2022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 연구 <대전시 자살예방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수행된 분석의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2) OECD 주요 회원국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11년에는 한국이, 2013~2017년 사이에는 리투아니아가 한국보다 높았으나, 2018년 이후 한국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119).

이러한 맥락에서 선행연구들은 지자체의 자살예방계획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발(송인한 외, 201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시행계획 분석(김정수 외, 2017; 2018),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계획 모형이나 자살예방통합서비스 체계 구축(강상경 외, 2019; 최명민 외, 2019),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분석(전미선·한승혜, 2020) 등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다양한 차원을 다루고 있다. 본고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했던 전미선·한승혜(2020)의 연구를 참고하여, 탐색적인 차원에서 대전시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대전시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자살예방사업계획수립과 사업의 시행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의 한계 상 대상이 한정적이며, 사업의 효과성을 사업 수행 연도로만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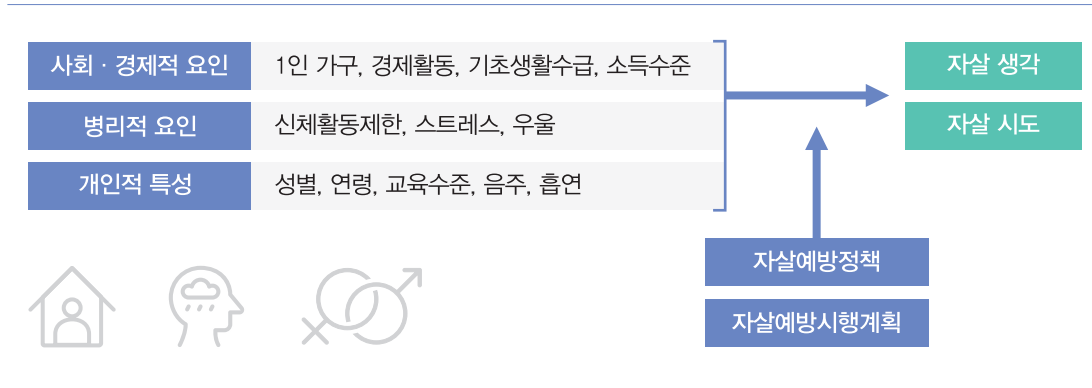
II — 연구 설계

01 연구 모형

대전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은 선행연구(전미선·한승혜, 2020)의 연구 모형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이 자살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에 사회·경제적 요인, 병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예방시행계획수립을 정책 변수로 설정하여, 자살예방사업의 시행과 시행계획의 수립이 자살 생각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는 사회·경제적요인, 병리적 요인, 개인적 특성이 통제 변수로 포함되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가구원 수(1인 가구), 경제활동참여, 기초생활수급, 소득수준, 병리적 요인에는 신체활동제한, 스트레스, 우울,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음주, 흡연여부를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고에서는 자살예방사업수행과 더불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의 정책효과를 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사업의 수행과 자살예방시행계획수립을 포함하는 사업 수행의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자살 시도 경험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 경험을 종속변수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본 고의 분석에 활용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보건소별 평균 900여 명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표집하여, 대전광역시의 표본 수가 다소 적기 때문이기도 하며(2022년 기준 자살 시도자 수 93명, 전체 0.51%), 더불어 자살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 인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림 1〉 연구 모형



02 분석 자료와 방법

1) 분석자료

본 고에서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중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변수가 포함된 2009년, 2013년, 2017년, 2021년 4개 연도의 자료이다.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을 근거로 질병관리청·17개 시도 및 255개 보건소·34개 책임 대학교 간 기관 협력하에 수행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18개 영역의 163개 항목의 개인 건강 현황에 대한 조사이다.

본 고의 핵심 변수인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가 포함된 4개 년도별 응답 수는 2009년 4,587건, 2013년 4,586건, 2017년 4,577건, 2021년 4,610건으로 총 18,360건이며, 자살위험군(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경우)은 2009년 427건, 2013년 415건, 2017년 270건, 2021년 313건으로 총 1,425건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 측정 방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자살 생각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이다. 자살생각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자살 생각을 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고, 자살 시도 역시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1,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대전시의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이다. 먼저, 자살예방사업은 사업의 시행 여부를 변수화한 것으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음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구가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연도를 1, 그렇지 않은 연도를 0으로 측정하였다. 이에 2009년은 0, 2013년~2021년은 1로 측정하였다. 다만, 2013년의 경우 각 지역구별로 시행되었다고 명시된 연도가 다르게 명시되어, 2012년에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명시된 3개구(동구, 서구, 유성구)는 1로, 나머지 2개구(중구, 대덕구)는 0으로 측정하였다.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자살예방사업시행 연도는 각 자치구의 정산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의 연혁을 참고하였다.³⁾

다음으로 자살예방시행계획은 계획의 수립 여부를 변수화한 것으로, 2017년부터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연도를 1, 그렇지 않은 연도를 0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2009년, 2013년은 0, 2017년과 2021년은 1로 측정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수립 연혁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문서자료는 찾지 못하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문의를 통해 계획 수립 연도를 파악하였다.⁴⁾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전미선·한승혜, 2020)에서 제시한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를 참고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적 특성, 사회·경제적 요인, 병리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음주, 흡연을 포함하였고, 연령의 경우 자살위험군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 65세 이상을 1, 19세 이상 65세 미만을 0으로 측정하였다. 교육수준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를 1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음주의 경우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흡연은 궤련형과 액상형 니코틴을 매일 피우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은 사회적 고립 혹은 단절되어있거나, 경제적 제약 상황을 확인하는 변수로 가구, 사회생활,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였다. 먼저, 가구원 수는 가정 내 교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1인 가구인 경우를 1로, 그 외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생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직업활동 변수로 직업종사자, 주부, 무직, 학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2021년 자료의 경우 주부, 무직,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종사

3)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자살예방사업시행 연도는 각 자치구의 정산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의 연혁을 참고하였다.

4) 기초자치단체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연혁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문서자료는 찾지 못하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문의를 통해 계획 수립 연도를 파악하였다.

상의 지위를 측정하여 본 고에서는 경제활동 여부로 변수를 변경하였다. 경제적 상황은 기초생활수급권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소득수준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실질적 빈곤 수준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병리적 요인은 첫째, 운동능력, 자기관리능력, 일상활동, 통증·불편의 네 가지 질문에서 신체활동에 다소 지장이있거나 매우 심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1, 어떠한 지장도 없는 경우를 0으로 신체활동제약 여부를 측정하였다. 둘째, 정신 혹은 정서적 측면에서 스트레스는 단일문항으로 스트레스를 평소에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경우를 1로 “조금” 혹은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고, 우울 역시 단일 문항으로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측정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자살 생각	'1=있음', '0=없음'	
	자살 시도	'1=있음', '0=없음'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1=남성', '0=여성'
		연령	'1=만65세 이상', '0=만65세 이하'
		교육수준	'1=전문대 이상', '0=고등학교 이하'
		음주	'1=예', '0=아니오'
		흡연	'1=예', '0=아니오'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1=1인 가구, '0=2인 가구 이상'
		경제활동	'1=예', '0=아니오'
		기초생활수급	'1=예', '0=아니오'
		소득수준(월)	'1=100만 원 미만', '0=100만원 이상'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제약	'1=예', '0=아니오'
		스트레스	'1=예', '0=아니오'
		우울	'1=예', '0=아니오'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사업시행 연도 '1=2013, 2017, 2021', '0=2009' 단, 2013의 경우 2012년도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한 지역구만 '1'로 측정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	'1=2017, 2021', '0=2009, 2013'	

3) 분석 방법

본 고에서 활용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연도별로 응답자를 추적하는 패널조사가 아닌 연도별 횡단조사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고에서 활용하는 분석 자료는 4개 연도의 합동 횡단면 자료(pooled cross-sectional data)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연도별로 자살생각 경험,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기초통계를 제시하였고, 통제변수, 독립변수와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사업시행과 자살예방사업계획수립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III — 분석 결과

01 기초통계

분석에 포함된 연도별 자살생각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의 분석 결과 먼저, 자살 생각 경험의 비율은 2009년 9.31%, 2013년 9.05%, 2017년 5.90%, 2021년 6.79%로 2009년과 비교할 때 2021년 자살 생각 경험자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비해 2021년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리고 자살 생각 경험의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54.2523, p < .001$).

다음으로 자살 시도 경험을 보면 조사 대상 전체 중 2009년 0.74%, 2013년 0.39%, 2017년 0.39%, 2021년 0.5%로 2009년에 비해 2013년, 2017년은 다소 감소, 2021년에는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 시도 경험의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전체 대상자에서 매우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살위험군(자살생각 경험자)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 역시 2009년 6.56%, 2013년 4.10%, 2017년 6.67%, 2021년 6.71%로 2013년을 제외하고,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연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자살 생각의 경험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살 시도의 경험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자살 생각 경험자 중 자살 시도 경험자의 비율도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자살 생각 경험, 자살 시도 경험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3년	2017년	2021년	χ^2
자살 생각 경험	예	427	415	270	313	54.2523***
		9.31	9.05	5.90	6.79	
	아니오	4,160	4,170	4,307	4,297	
		90.69	90.95	94.1	93.21	
자살 시도 경험	예	34	18	18	23	7.3669
		0.74	0.39	0.39	0.5	
	아니오	4,553	4,568	4,559	4,587	
		99.26	99.61	99.61	99.5	
자살위험군 자살시도 경험	예	28	17	18	21	3.4218
		6.56	4.10	6.67	6.71	
	아니오	399	398	252	292	
		93.44	95.9	93.33	93.29	

***p<.001

다음으로 조사 기간 전체 자살 생각 경험,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조사기간 전체 자살생각 경험과 관련 변수들의 관계는 아래 [표 3]과 같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의 자살 생각 경험과 관련 요인들 중 흡연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자살 생각 경험은 5.73%, 여성은 9.5%로 여성의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았다. 만 65세 미만은 6.94%, 만 65세 이상은 11.52%로 만 65세 이상에서 자살 생각 비율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는 10.23%, 전문대학 이상은 5.03%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에서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더 높았고, 음주의 경우 음주를 하는 집단(9.85%)이 음주를 하지 않는 집단(7.60%)에 비해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았고, 흡연 집단에 비해 비흡연 집단의 자살 생각 비율이 조금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인 가구인 경우 12.19%, 2인 가구 이상인 경우 7.14%로 1인 가구의 자살 생각 비율이 더 높았고, 경제활동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5.57%, 비경제활동인구는 10.87%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자살생각 비율이 높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23.42%, 아닌 경우는 7.13%로 기초생활수급 집단의 자살 생각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수준의 경우 100원 미만인 집단의 자살 생각 경험 비율(17.19%)이 100만원 이상인 집단(7.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제약이 있는 집단(17.44%)이 제약이 없는 집단(4.90%)에 비해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19.03%)이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3.77%)에 비해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우울의 경우 역시 우울을 경험한 집단이 48.10%, 우울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4.79%로 우울을 경험한 집단의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한 연도는 자살 생각 경험이 6.29%, 자살예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연도는 9.33%로 자살예방시행 연도의 자살 생각 비율이 더 낮았고, 자살예

방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연도는 6.35%, 그렇지 않은 연도는 9.18%로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연도의 자살 생각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살생각 경험과 관련 변수 교차분석

구분	변수		범주	자살생각		χ^2	
				예	아니오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남	485(5.73)	7,978(94.27)	90.4630***	
			여	940(9.50)	8,956(90.50)		
		연령	만65세 미만	1,044(6.94)	14,008(93.06)	79.6147***	
			만65세 이상	381(11.52)	2,926(88.48)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986(10.23)	8,651(89.77)	172.7946***	
			전문대학이상	439(5.03)	8,283(94.97)		
		음주	주2회 이상	130(9.85)	1,190(90.15)	8.6495**	
			주1회 이내	1,295(7.60)	15,744(92.40)		
		흡연	매일 흡연	284(8.35)	3,118(91.65)	2.0041	
			비흡연/가끔흡연	1,141(7.63)	13,816(92.37)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예	276(12.19)	1,988(87.81)	70.7555***
				아니오	1,149(7.14)	14,946(92.86)	
	경제활동		예	600(5.57)	10,163(94.43)	174.0019***	
			아니오	824(10.87)	6,759(89.13)		
	기초생활 수급		예	167(23.42)	546(76.58)	254.3435***	
			아니오	1,257(7.13)	16,385(92.87)		
	소득수준 (월 기준)		100만 원 미만	164(17.19)	790(82.81)	127.6465***	
			100만 원 이상	1,067(7.12)	13,919(92.88)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 제약	예	730(17.44)	3,455(82.56)	709.6611***
				아니오	695(4.90)	13,479(95.10)	
			스트레스	예	914(19.03)	3,890(80.97)	1.2e+03***
				아니오	511(3.77)	13,039(96.23)	
		우울	예	606(48.10)	654(51.90)	3.1e+03***	
			아니오	819(4.79)	16,279(95.12)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시행	826(6.29)	11,113(93.08)	33.9180***		
		미시행	599(9.33)	5,821(90.67)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	수립	583(6.35)	8,604(93.65)	51.4956***		
		미수립	842(9.18)	8,330(90.82)			

p<.01 *p<.001

다음으로 자살위험군(자살 생각 경험이 있는 집단)의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주, 흡연, 경제활동, 기초생활수급, 우울 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살위험군 중 매일 흡연하는 집단의 자살 시도 경험은 10.21%, 비흡연 혹은 가끔 흡연 집단은 4.82%로 매일 흡연을 하는 집단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이 더 높았

다. 경제활동집단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3.17%, 비경제활동집단은 7.89%로 비경제활동 집단의 자살 시도 경험이 더 많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14.37%,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는 4.77%로 나타나 기초수급권자의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다. 우울을 경험한 집단의 자살 시도 비율은 10.64%, 그렇지 않은 집단은 2.56%로 나타나, 우울 집단의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예방사업시행,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수립 여부에 따른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자살시도 경험과 관련 변수 교차분석

구분	변수		범주	자살생각		χ^2
				예	아니오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남	25(5.15)	460(94.85)	0.7260
			여	59(6.28)	881(93.72)	
		연령	만65세 미만	16(4.20)	365(95.80)	2.6942
			만65세 이상	68(6.51)	976(93.49)	
		교육수준	고등학교 이하	24(5.47)	415(94.53)	0.2093
			전문대학이상	60(6.09)	926(94.53)	
		음주	주2회 이상	15(11.54)	115(88.46)	8.2138**
			주1회 이내	69(5.33)	1,226(94.67)	
	흡연	매일 흡연	29(10.21)	455(89.79)	11.9135**	
		비흡연/가끔흡연	55(4.82)	1,086(95.18)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예	17(6.16)	259(93.84)	0.0432
			아니오	67(5.83)	1,082(94.17)	
		경제활동	예	19(3.17)	581(96.83)	13.9443***
			아니오	65(7.89)	759(92.11)	
		기초생활 수급	예	24(14.37)	143(85.63)	24.4646***
			아니오	60(4.77)	1,197(95.23)	
소득수준 (월 기준)		100만 원 미만	12(7.32)	152(92.68)	0.5709	
		100만 원 이상	62(5.81)	1,005(94.19)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 제약	예	51(6.99)	679(93.01)	3.2149	
		아니오	33(4.75)	662(95.25)		
	스트레스	예	62(6.78)	852(93.22)	3.6283	
		아니오	22(4.31)	489(95.22)		
	우울	예	63(10.64)	543(89.60)	38.5125***	
		아니오	21(2.56)	798(97.44)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시행	49(5.93)	777(94.07)	0.0050	
		미시행	35(5.84)	564(94.16)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	수립	39(6.69)	544(93.31)	1.1236	
		미수립	45(5.34)	797(94.66)		

p<.01 *p<.001

02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살예방사업시행과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이 자살생각 경험과 자살위험군의 자살 시도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모형은 4가지로 분석모형 1은 자살예방사업수행 그리고 통제변수와 자살예방사업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분석모형 2는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 그리고 통제변수와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것이다. 다음으로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모형 3은 자살예방사업수행 그리고 통제변수와 자살예방사업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 분석모형 4는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 그리고 통제변수와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우선적으로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Hosmer and 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Hosmer, Lemeshow, and Sturdivant(2013: 157-160)은 공변량 패턴 수가 관측치 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피어슨 검정보다는 예측된 확률에 따라 정렬한 뒤 거의 유사한 크기의 집단 10개를 설정, 자료를 재집단화 한 후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고는 이러한 제안에 따라 Hosmer and Lemeshow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 1과 분석 모형 2의 경우 Hosmer and Lemeshow 검정 결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표 5], [표 6] 참조), 따라서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워 자살예방사업과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자살위험군의 자살시도 생각에 자살예방사업수행과 사업수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모형 3과 자살예방시행계획수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4의 경우 Hosmer and Lemeshow 검정 결과 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8] 참조). 모형 3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 중 연령, 경제활동, 기초생활수급, 스트레스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65세 연령 이상인 사람은 그 이하의 사람보다 자살 생각 경험 가능성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의 경우 자살 생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자살예방사업시행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상호작용항 중 우울감과 자살예방사업시행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오히려 자살 생각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모형 4의 분석결과를 보면 통제변수 중 연령, 음주, 경제활동, 기초생활수급,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65세 연령 이상인 사람은 그 이하의 사람보다 자살 시도 가능성이 낮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낮았다. 반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의 경우 자살 시도의 가능성이 높았다.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은 자살 시도의 가능성을 84.5%(.845=1-.155) 감소시키고 있었다. 상호작용항에서는 1인 가구, 스트레스, 우울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스트레스는 자살 시도를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1인 가구와 우울감의 경우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이 일정 부분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우울이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연구 모형1의 분석 결과¹⁾

구분	변수	Odds R.	S.E.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남성)	.650***	.092
		연령(65세이상)	1.343	.212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691**	.092
		음주	1.925**	.438
		흡연	1.187	.191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1.334	.234
		경제활동	.718*	.093
		기초생활수급	1.866**	.381
		소득수준(100만 원 미만)	1.725***	.252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제약	1.657***	.220
		스트레스	4.010***	.479
		우울	7.853***	1.083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1.527+	.339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		.410***	.077	
상호 작용	성별 × 사업	1.153	.203	
	연령 × 사업	.613*	.122	
	교육수준 × 사업	.881	.146	
	음주 × 사업	.766	.211	
	흡연 × 사업	1.087	.227	
	1인 가구 × 사업	.974	.206	
	경제활동 × 사업	.846	.138	
	기초생활수급 × 사업	.653	.173	
	소득수준 × 사업 ²⁾	1.000	(omitted)	
	신체활동제약 × 사업	1.553**	.253	
	스트레스 × 사업	.993	.149	
	우울 × 사업	1.229	.210	
cons		.034***		
N		15,929		
Hosmer and Lemeshow test $\chi^2(10)$		20.06*		

+p<.1, *p<.05 **p<.01 ***p<.001

1)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2009년 기준)와 지역더미(동구 기준)를 포함하였음.

2) 소득수준 × 사업시행의 상호작용항은 공선성 문제로 제외되었음.

〈표 6〉 연구 모형2의 분석 결과¹⁾

구분	변수	Odds R.	S.E.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남성)	.076
		연령(65세이상)	.137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676***
		음주	1.705**
		흡연	1.279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1.247
		경제활동	.687***
		기초생활수급	1.933***
		소득수준(100만 원 미만)	1.762***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제약	2.155***
		스트레스	3.728***
		우울	7.796***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1.524**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		.387***	
상호 작용	성별 × 사업	1.216	
	연령 × 사업	.882	
	교육수준 × 사업	.872	
	음주 × 사업	.888	
	흡연 × 사업	.946	
	1인 가구 × 사업	1.079	
	경제활동 × 사업	.895	
	기초생활수급 × 사업	.546*	
	소득수준 × 사업 ²⁾	1.000	
	신체활동제약 × 사업	1.063	
	스트레스 × 사업	1.153	
	우울 × 사업	1.314	
cons		.034***	
N		15,929	
Hosmer and Lemeshow test χ^2		19.42*	

*p<.05 **p<.01 ***p<.001

1)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2009년 기준)와 지역더미(동구 기준)를 포함하였음.

2) 소득수준 × 사업시행의 상호작용항은 공선성 문제로 제외되었음.

〈표 7〉 연구 모형3의 분석 결과¹⁾

구분	변수	Odds R.	S.E.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남성)	.541	.258
		연령(65세이상)	.362+	.202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1.521	.681
		음주	4.371*	3.112
		흡연	1.925	.926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391	.274
		경제활동	.214**	.102
		기초생활수급	5.624***	2.504
		소득수준(100만 원 미만)	.788	.399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제약	1.900	.819
		스트레스	4.148**	2.084
		우울	6.753***	2.908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858	.784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		.378	.267	
상호 작용	성별 × 사업	.913	.565	
	연령 × 사업	1.765	1.242	
	교육수준 × 사업	.528	.306	
	음주 × 사업	.772	.639	
	흡연 × 사업	1.760	1.097	
	1인 가구 × 사업	3.712	3.007	
	경제활동 × 사업	1.895	1.147	
	기초생활수급 × 사업	.384	.245	
	소득수준 × 사업 ²⁾	1.000	(omitted)	
	신체활동제약 × 사업	.961	.536	
	스트레스 × 사업	.359	.222	
	우울 × 사업	5.707**	3.471	
cons		15,930		
N		15,929		
Hosmer and Lemeshow test $\chi^2(10)$		6.01		

+p<.1, **p<.01 ***p<.001

1)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2009년 기준)와 지역더미(동구 기준)를 포함하였음.

2) 소득수준 × 사업계획의 상호작용항은 공선성 문제로 제외되었음.

〈표 8〉 연구 모형4의 분석 결과¹⁾

구분	변수	Odds R.	S.E.	
통제 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남성)	.515	.222
		연령(65세이상)	.344*	.172
		교육수준(고등학교 이상)	1.088	.445
		음주	3.229+	2.226
		흡연	2.367	1.024
	사회· 경제적 요인	1인 가구	.372	.228
		경제활동	.232**	.098
		기초생활수급	4.840***	1.990
		소득수준(100만 원 미만)	.771	.421
	병리적 요인	신체활동제약	2.141*	.817
		스트레스	3.707**	1.642
		우울	7.593***	2.940
	독립 변수	자살예방사업	1.576	.961
자살예방사업수행계획		.155+	.151	
상호 작용	성별 × 사업	1.063	.649	
	연령 × 사업	2.290	1.578	
	교육수준 × 사업	.892	.510	
	음주 × 사업	1.240	1.014	
	흡연 × 사업	1.267	.774	
	1인 가구 × 사업	4.513*	3.431	
	경제활동 × 사업	1.791	1.063	
	기초생활수급 × 사업	.451	.296	
	소득수준 × 사업 ²⁾	1.000	[omitted]	
	신체활동제약 × 사업	.742	0.405	
	스트레스 × 사업	.364+	.215	
	우울 × 사업	6.134**	3.824	
cons		.002***		
N		15,930		
Hosmer and Lemeshow test χ^2		3.44		

+p<.1, *p<.05 **p<.01 ***p<.001

1) 분석모형에는 연도더미(2009년 기준)와 지역더미(동구 기준)를 포함하였음.

2) 소득수준 × 사업시행의 상호작용항은 공선성 문제로 제외되었음.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살예방사업이 수행된 연도는 그렇지 않은 연도에 비해 자살 생각 경험이 낮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이 수립된 연도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살 생각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살 시도 경험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살 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자살예방사업시행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못하였으나,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이후 자살 시도 경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

다. 즉 자살예방시행계획을 통한 사업 수행의 정책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살 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한 결과 1인 가구와 우울감의 경우 자살 시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위험군 중 1인 가구와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자살 시도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살예방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들로 인해 자살 시도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1인 가구나 우울을 경험하는 자살위험군을 최우선 접근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 결론 및 제언

본고는 2013년부터 시행된 대전시의 자살예방사업과 2016년부터 시행된 자살예방사업계획수립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모형 적합도가 확보되지 않아 자살 생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자살 시도 경험에는 자살예방사업계획수립과 사업 시행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자살 시도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1인 가구와 우울의 상호작용항의 경우 자살 시도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1인 가구 여부와 우울이 자살 시도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전반적으로 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 수행은 자살위험군의 자살 시도 경험을 줄이는 효과를 보이지만,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즉, 본 고의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 스트레스,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자살위험군 중에서도 최우선적 개입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면 자살예방사업수행에 있어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며, 자살예방계획수립에 있어 지역별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할 때, 저소득, 1인 가구,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개입이 필수적이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혹은 프로그램)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분석 모형에 포함된 지역변수(자치구)는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였다. 즉, 자살 시도 경험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달리할 필요는 있으나, 본 고의 분석결과에 기반하면 자살 시도의 지역별 차이를 지역 사업 수행의 차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별 차

이를 고려한 자살예방사업의 평가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다만, 본 고의 분석모형은 자살예방사업수행 연도와 자살예방사업시행계획수립이 이루어진 연도에 한정되어 자살 생각과 관련된 자살예방환경 조성이나 자살 시도와 관련된 자살예방서비스의 효과를 분리하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성 혹은 사업별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상경 외(2019), <지역 환경 맞춤형 자살예방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대안에 대한 연구>, 보건복지부.
- 김정수 외(2017),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전국 지자체 자살예방계획서의 내용분석”, <비판사회정책>, 55:257-290.
- 김정수 외(2018) “2017년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 제3차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을 기준으로 한 구성요소 및 세부과제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3호, 580-601.
- 전미선 · 한승혜(2020),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 분석 -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시도에 대한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서울도시연구>, 21(1):93-109.
- 최명민 외(2019), <도시지역 자살발생 차이요인 분석과 자살예방계획수립을 통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계획 모형개발>, 보건복지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2), <2022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Caan, W., 2013, “Urgent need for proactive leadership in local suicide prevention plans”, *British Medical Journal* 346, : f1529.
- Hosmer, D. W., Jr., Lemeshow, S. A. and Sturdivant, R. X.(2013). *Applied Logistic Regression*, 3rd ed, Hoboken, NJ: Wiley.
- Nakanishi, M., Yamauchi, T. and Takeshima, T.(2015),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in Japan: The impact of a national fund on the progress of developing systems for suicide prevention and implementing initiatives among local authoriti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9(1), 55-64.
- Torjesen, I., 2013, “Local authorities must have suicide prevention plans, saysparliamentary report”, *British Medical Journal*, 346,: f645.
- WHO(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World Health Organization.

DAEJEON

정담(情談)

모두가 누리는 문화
모두를 위한 복지

ISSUE & TALK

/오영진

베리어프리네트워크 대표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회복적 대화·평화서클 진행자

FOCUS_IN

/이해리

대전청년내일센터
정책기획팀 팀장

/홍영훈

세종청년센터 센터장

대전과 세종의 소식

/장성재

대전세종연구원 국제협력담당

/최대원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사업본부장

/김현영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SEJONG

무	대
장	한
애	
관	이
광	야
에	기

오영진 베리어프리네트워크 대표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통계적으로 한국은 2022년부터 실질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장애인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장애 인구의 대다수는 고령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장애를 겪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인구통계적으로 장애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는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 또한 중요하다는 것과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인해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적인 복지 인프라 전부를 이야기 하기에는 본 주제와 벗어나기에 일단, 본 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외부 활동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인 나는 집밖을 나선 순간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가로등에 막혀 도로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1시간씩 기다렸다가 타기도 한다.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1~2 km를 이동하기도 하고, 가고 싶은 식당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못가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틈없는 맛집을 찾거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과 장애인 콜택시가 빨리 배차되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등의 일상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가능한 나만의 노하우를 습득하여 일부 해소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면, 수많은 불편함이 한꺼번에 엄습해 온다.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

무장애 관광은 기본적으로 외부활동 전반에 걸치는 모든 인프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무장애

관광이 잘되어 있다는 것은 그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또한 올라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무장애 관광의 필요성을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 보자면 첫째로,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제주도 천지연 폭포의 경우 폭포까지 무장애 길을 조성하면서 휠체어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관광객 수가 증가했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객의 경우 더 많은 금액을 관광지에서 소비한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장애 인구가 늘어난다면 무장애 관광은 필수적이며, 우수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둘째, 무장애 관광 인프라는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장애와 관련된 디테일한 정보가 없어도 교통 및 편의시설을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관광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쾌적한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관광지 보행로의 계단을 없애고 평탄화를 했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비장애인들의 관광피로도

줄어든다. 또한, 원주민인 장애인들의 일상의 문화 향유권과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와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교통을 통한 다양한 사회활동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이 올라간다.

셋째, 장애인구의 사회적 노출 빈도가 올라갈수록 무장애 인프라 개선은 촉진된다. 장애에 대한 대다수 문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이 크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 이용자가 기차를 탈 때면 휠체어 리프트를 기차 옆에 따로 설치하고 타게 되는데, 사전에 리프트를 신청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 기차 출발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애초에 장애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기차역 플랫폼을 높게 만들어서 기차를 지하철 타듯이 탈 수 있게 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 전국의 기차 플랫폼을 고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에 모두 고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사업장 법정 의무 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있지만, 강의 하나 들었다고, 인식이 확 바뀌기는 힘들다. 필자가 장애인 인식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청중에게 장애인을 1개월 안에 본 적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없거나 소수일 경우가 많다. 일상에서 장애인들이 많은 사람과 어우러지면 큰 부담없이 장애에 대한 인프라는 개선될 것이다. 쉽게 말해 내 친구가 샐러드 가게를 열 때, 말도 안 했는데 경사로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정보제공

장애 청년 커뮤니티에서 다 함께 야구장에 간 적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야구장 장애인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장애인석은 온라인 예매가 없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야구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듣고 전화 예약으로 티켓을 예매하였다. 야구장을 다녀오고 나서 한 친구가 “야구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 모르고 안 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자주 오겠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렇듯 무장애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활동범위와 횟수가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대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좋은 경험을 하는 관광지와 핫플레이스를 찾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온라인 지도로 만드는 활동을 시



작하게 되었다. 물론 타 지역에서도 무장애 온라 인지도를 만드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지만, 민간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대전은 무장애 청년 커뮤니티를 통해 일상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지역 공공기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정보를 모으거나,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교통환경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무장애 관광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동을 위한 교통의 접근성 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가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자 대비 차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콜택시의 예산을 무한정 늘리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택시, 지하철, 시내버스, 시티투어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전동 휠체어, 자전거, 유모차, 킥보드 등의 사용자들 모두가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율은 거의 0%에 가까운데, 가장 큰 이유는 저상버스 기사님이 간혹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탑승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휠체어로 진입이 불가능하여 정류장 앞에서 대기할 경우 승객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전에서는 저상버스 기사님과 소통하는 APP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모두의 대중교통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마치며

물리적으로 예산을 늘려야 해결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장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장애인 복지”라는 영역에 가두고 예산분배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사고로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넷제로를 하기 위해 전기버스, 전기택시로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할 때, 휠체어 또한 실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비장애인 시민들도 킥보드나 자전거를 싣고 택시를 탈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수반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의지만 있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무장애 관광을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





아래로부터 평화 만들기

여성주의 평화활동단체 대전평화여성회를 소개합니다

글_ 최영민 대전평화여성회 회복적 대화·평화서클 진행자



대전평화여성회 창립 배경과 의미

대전평화여성회는 2007년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올해 15주년을 맞이했다. 창립부터 현재까지 단체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전평화여성회는 내 삶과 밀착한 단체이고, 평화배움터다. 대전평화여성회를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어 고맙다. 단, 이 글은 전적으로 내 기억과 관점에서 서술한 한계가 있음도 말해둔다.

창립배경에는 우선 이정순(대전평화여성회 창립 대표)선생님이 계셨다. 배움과 실천에 늘 선구적이고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이 있던 선생님은 여성과 평화운동에 대한 혜안으로 지역에서 여성평화운동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체 창립까지 매우 애쓰셨다.

대전여민회의 역할도 크다. 1987년 창립한 대전지역 진보여성단체로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성 의제를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하게 뒤에서 앞에서 챙겨주는 대전여민회는 대전여성운동사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1. 2021 여성중전선언캠페인
2. 2021 기림일 기념 평화강연회

당시 대전어민회 활동을 하던 회원 중 여성주의와 평화운동의 결합과 실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대전평화여성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남북교류와 화해 분위기 속에 비폭력평화운동, 평화담론이 확장했고, 전쟁과 평화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여성의 안전과 안보, 평화형성 과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도 주요했다. 서울 중심으로 시작된 여성평화운동을 지역에서도 연결하고 확산시키는 창립회원들의 동기와 동의는 가장 단단한 창립의 주춧돌이었다.

* 전쟁과 여성, 끝나지 않은 전쟁과 '위안부'

대전평화여성회 정관 제3조 <목적>은 지역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 여성, 평화공동체로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평화를 인식하고 확산하며, 남북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적시했다. 원대한 꿈이자 목표다.

대전평화여성회는 이 목적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과 평화 관련 사안은 자체활동과 연대활동을 두루 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주요 활동을 정리해 소개한

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되새김해야 하는 평화와 전쟁, 여성과 인권 활동이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성의 몸에 각인된 고통과 상처는 끝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로 이름을 바꾼 전시·전후 성폭력은 가난, 계급, 젠더 앞에 더 가혹한 성폭력의 역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이후 그 존재를 국내외에 드러냈다. 대전평화여성회는 전시 성폭력 문제가 여성 개인의 잘못이나 수치가 아니라 성차별이 낳은 구조적 성폭력 문제이며 반인륜적 여성인권침해 사안임을 알리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여성 인권 사안으로 포착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5년 평화통일과 여성안보 컨퍼런스를 주최해서 유엔안보리 1,325호와 평화구축,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분단체제 극복과 평화협정운동 주체로서 여성, 비폭력 갈등해결과 비폭력교육에 대한 의미 있는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대전평화의 소녀상건립

추진위에 참여해 평화비 건립과 평화나비 대전행동 네트워크 단체로서 수요문화제 주최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회 '진실과 정의를 기억하다'를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기억하며 '진실과 평화 그림공모전'과 전시회, 강연회, 영상제작, 교육, 기행 등 다양한 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진실과 평화 그림공모전' 출품작 중 한 학생의 작품은 올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속, 고래 이미지를 차용해 커다란 고래 위에 소녀상을 닮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모습을 그렸다. 고통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 고통을 기억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의 방식이기에 대전 평화여성회의 활동은 의미가 있다.



평화를 만드는 교육 -

회복적생활교육, 회복적조정, 평화서클

대전평화여성회 중심활동의 다른 하나는 평화를 배우고 만들어가는 교육과 실천적 개입이다. 대전평화여성회 평화교육팀은 평화도 배워야 한다는 인식 하에 삶에서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갈등과 문제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곳을 찾아가 교육하고 있다.

교육은 존엄한 존재에 대한 존엄,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 맺기, 비폭력적 해결책 모색을 위한 개인의 평화적 갈등해결능력 향상과 타인의 갈등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제3자 개입을 위한 진행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통칭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위한 평화교육은 장기간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과 교사를 위한 일상적인 상호존중과 비폭력 삶을 환기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훈련과정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은 회복적 정의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3

3. 2020 기림일 기념 그림공모 수상작 전시회

4. 2022 평화그림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4



5. 평화서클
6.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는 잘못된 일과 범죄, 손해를 다룰 때, 처벌과 응보 위주로 다루어지는 것을 응보적 정의로 명명하고, 이와 상반되고 보완적인 개념으로 회복의 의미를 붙여 회복적 정의로 호명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현재 학교와 경찰, 법원에서 이미 갈등조정지원단, 회복적경찰활동, 화해권고 이름으로 제도 내에서 다양하게 적용,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활동은 당사자 간 공식적·비공식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발생한 일의 원인과 진실을 이해하고,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를 입힌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일을 직시하고 직접 사과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대안분쟁해결방식의 가장 큰 의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기관중심 해결에 앞서, 당사자들의 필요와 요구,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해결과정에 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치심을 주거나 피해와 가해 상황을 증폭시키기 위한 갈등해결은 바람직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다는 것을 대전평화여성회가 정성스런 교육과 실천적 개입으로 많은 이에게 알리고, 그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 오랜 활동에서 얻은 교훈

대전평화여성회 활동 분야와 지향점은 여성, 평화, 회(공동체), 대전이라는 단체명에 모두 들어있다. 단체명을 풀어 15년 활동에서 배운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과 여성주의 시각은 성차별과 성별 비대칭성으로부터 세상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들을 드러내고 연결하는 평등과 평화를 성찰하는 중요하고 변함없는 의제다. 평화는 전쟁의 반대말만이 아니라 일상에 평화가 없음을 인식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진다. 누구나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개인의 연합과 연대의 공동체는 어떤 시대든 인류의 이상이고, 현재 내가 발 딛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곳이 항상 활동의 중심임을 오랜 시간 단체 활동에서 배웠다.

“
아래로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배움과 전환의 삶, 비폭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많아지는 사회를 소망하며
대전평화여성회는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이다.”



청년복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대전청년내일센터

이하리 대전청년내일센터 정책기획팀 팀장



1. 2022 대전청년주간 행사 내 대전청년내일센터 부스 운영 모습
2. 3년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2022 대전청년주간 개막식 모습
3. 지난 3월 대전청년내일센터 개소식 모습



청년이 정책의 주체자로 나서기 위해

어떤 국가이든지 그 나라의 미래는 청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며 청년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해왔지만 청년정책은 큰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부단히 이어져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요구 다양화, 지자체의 청년정책 결핍, 고용정책 한계 등 심화되는 청년문제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보여준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대전광역시도 '대전시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정책수혜 대상인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중간지원조직 '대전청년내일센터' 설치였다.

2022년 3월 개소한 대전청년내일센터는 현재 대전역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는 정책기획, 활동지원, 공간운영 세 부분으로 나뉘어 청년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정책기획은 청년정책 및 사업 플랫폼 강화를 위해 △청년마음건

강지원 △청년주간 행사 △대전청년포털 구축 등 대표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우울, 불안감, 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목표 인원 275명이었던 마음건강지원사업은 343명(2020.9월 기준)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총 1,753회의 상담이 운영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사업은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담 이후에도 마음건강 키트를 배부하는 등 사후관리를 추진해 지역 청년들의 정서적 건강 강화에 힘쓰고 있다.

'청년주간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 결과 평가까지 참여하는 행사이다. 센터는 청년주간 행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대행사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올해 청년주간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절된 생활을 경험했던 청년들이 다시 연결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다시, 만난 우리>라는 주제로 기획된 가운데 3일간 무려 지역 청년 12,118명이 방문하여 행사를 즐겼다. 행사



지난 7월 개최된 2022 청년의 학교 입학식 모습

이후 지난 9월 27일 진행된 ‘청년주간 결과보고회’에서는 “청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역 예술가 및 공연가 초청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큰 활력을 얻었다”라며 청년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청년주간 행사 일정에 맞추어 센터는 ‘대전청년포털’ 구축 사업을 완료하였다. 대전청년포털은 대전 지역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이다. 2018년부터 대전광역시 지역 청년정책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춘광장’을 운영해 왔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청년내일센터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통합정보와 소통공간을 마련, 지역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 관련 통합 플랫폼인 대전청년포털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9월 오픈한 대전청년포털은 △일자리(채용·취업·창업지원) △주거(청년월세 지원, 청년하우스, 이사비용 지원) △복지·문

화(마음건강 지원, 1인가구 지원, 희망통장) △참여·소통(대청넷, 청년공간, 청년커뮤니티) 등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78개의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활동지원 역시 특별하다. 활동지원은 청년들의 연결망 형성에 힘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대청넷) △청년의 숲 △청년의 학교 등이 있다. ‘대청넷’은 대전의 대표적인 청년정책기구로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청년의제를 발굴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운영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올해 총 164명의 대청넷 회원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는 대청넷 회원들의 정책 제안, 정책 모니터링 등 정책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문가 및 청년 활동가와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대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의 숲’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청년 3인 이상의 비영리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멘토로 나서 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 봉사, 진로탐색, 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청년 커뮤니티 모임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 습득 없이는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이에 센터는 청년들이 원하는 주제나 관심사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청년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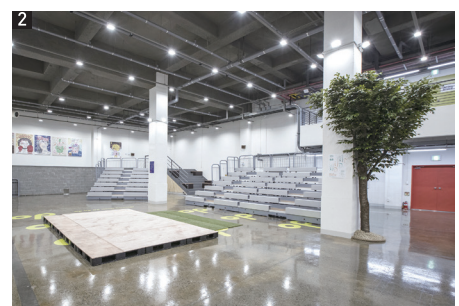
‘청년의 학교’ 사업은 대전 청년들이 또래 청년 활동가 또는 청년 기업가로부터 다양한 삶의 노하우를 배우며 진로 선택의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초록 클래스(환경을 위한 업사이클, 비건 교육 및 체험) △티(Tea) 칭 클래스(차와 다도 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체험) △우리 옷 한복 일상과(한복 및 전통 섬유공예에 대한 교육과 체험) △청년 로컬 드라마 학과(영상 콘텐츠 창작 교육 및 체험) △카페창업학과(카페 창업과 관련된 절차 및 창업 노하우 교육) △전통주 창작학과(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전통주 만들기 체험) △청년정책 dive학과(청년정책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토론) 등 7개 학과가 운영되었다. 약 3개월 동안 총 105명의 참여자들이 청년의 학교를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잠재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청년내일센터는 공간운영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전 청년 활동공간인 청춘나들목·청춘너나들이·청춘두두두를 통합 운영하면서 공간운영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청춘나들목은 정책 상담을 비롯한 지역 활동가 모임, 전문가 강연 등 청년 간 교류와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춘너나들이는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 활동, 역량강화 등을 위한 활동 공간이며, 청춘두두두는 공연, 강연,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처럼 공간별 위치, 크기, 활용도 등이 상이하므로 공간 특색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총 3곳의 공간을 통합 운영하게 된 만큼 날로 다양해지

는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체계적인 공간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주요 목적은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활발한 청년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제는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옮기는 미완의 시민이 아니며, 독자적인 시민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다른 세대와 달리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이면서 정책의 주체자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청년내일센터는 그간 청년정책의 최종 수혜자로만 인식됐던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이자 주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년들의 정책참여 실질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센터는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청년들과의 소통 통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간지원조직 ‘대전청년내일센터’는 지역 청년의 오늘을 함께 동행하며 더 나은 청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청년 활동공간 청춘나들목 모습
2. 청년 활동공간 청춘두두두 모습



청년의 다양한 사이를 지원합니다

홍영훈 세종청년센터 센터장



세종시청년센터는 2020년 6월 개소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중간지원조직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도시로 알려진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명성에 걸맞는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청년수도세종'을 앞세워 청년 지원정책을 세우고 있다. 세종시청년센터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과 정책 사이', '청년과 문화 사이', '청년과 공동체 사이', '청년과 정착의 사이', '청년과 센터 사이' 등 5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글은 청년 정책과 지역내 청년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포커싱해 보았다.

청년들의 다양한 사이를 지원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다양한 문제를 마주한 청년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의미는 청년들의 관계(사이)를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청년센터의 기능중에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인 청년 네트워크 구축은 모든 청년문제의 시작점인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조례 제 20조 ②항 7호) 세 번째 의미는 다양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사이에서 청년에게 체감되는 정책이 되기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분이다.

지역 청년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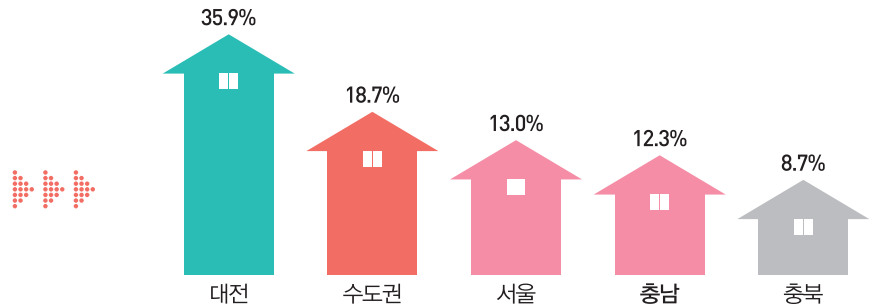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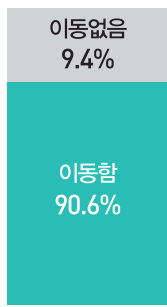
청년센터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청년생태계 조성'이라는 역할이다. '지역 청년생태계조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역 청년생태계조성, 어떻게 해야할까?

첫 번째 청년생태계조성의 당사자인 지역청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실태조사는 현재까지는 2019년도 자료이고, 3년이 지난 올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한번 더 이루어졌다. 청년들의 문제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몇 가지 지표를 찾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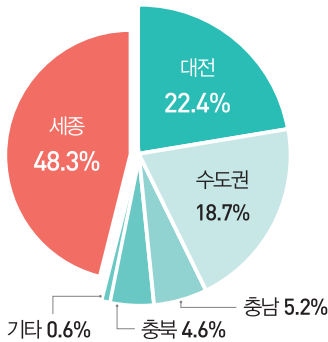
이동여부 및 전입 직전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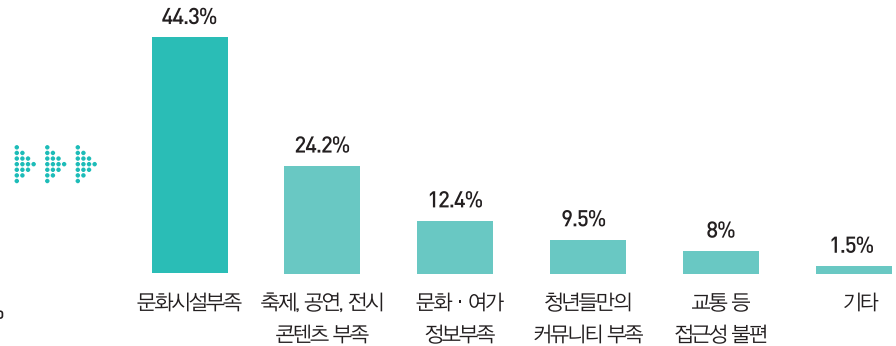
청년의 10명 중 9명 타지역 유입인구

자료 : 2019 세종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문화·여가 생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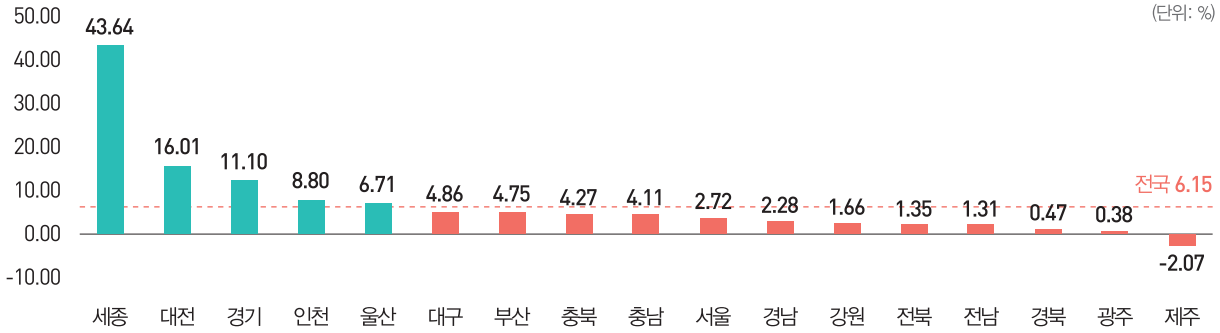


세종에서 문화·여가 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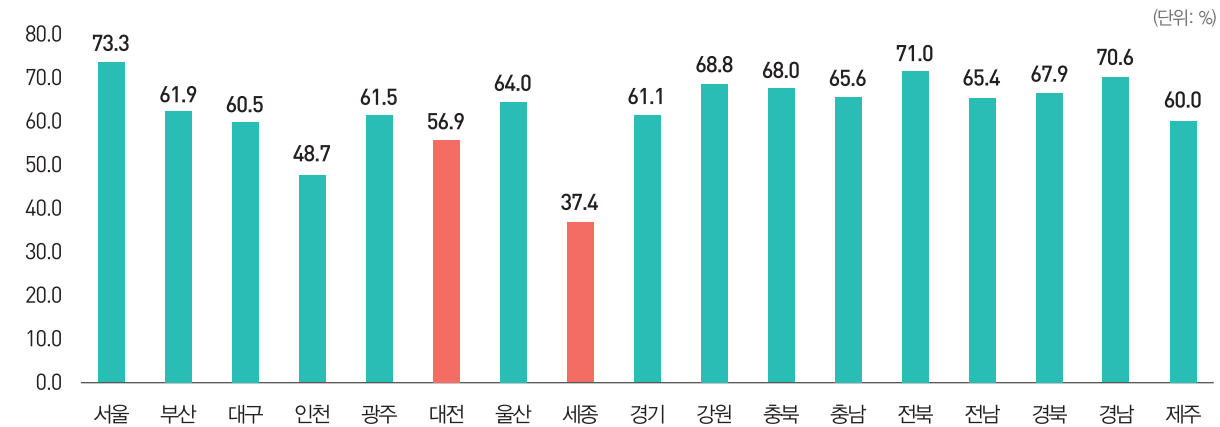
청년의 51.7% 외부지역에서 문화생활

자료 : 2019 세종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매매가격, 전세가격, 토지가격 상승률 전국 1위

자료 : 한국감정원 주 1) : 2020년 11월 기준 주 2) : 전년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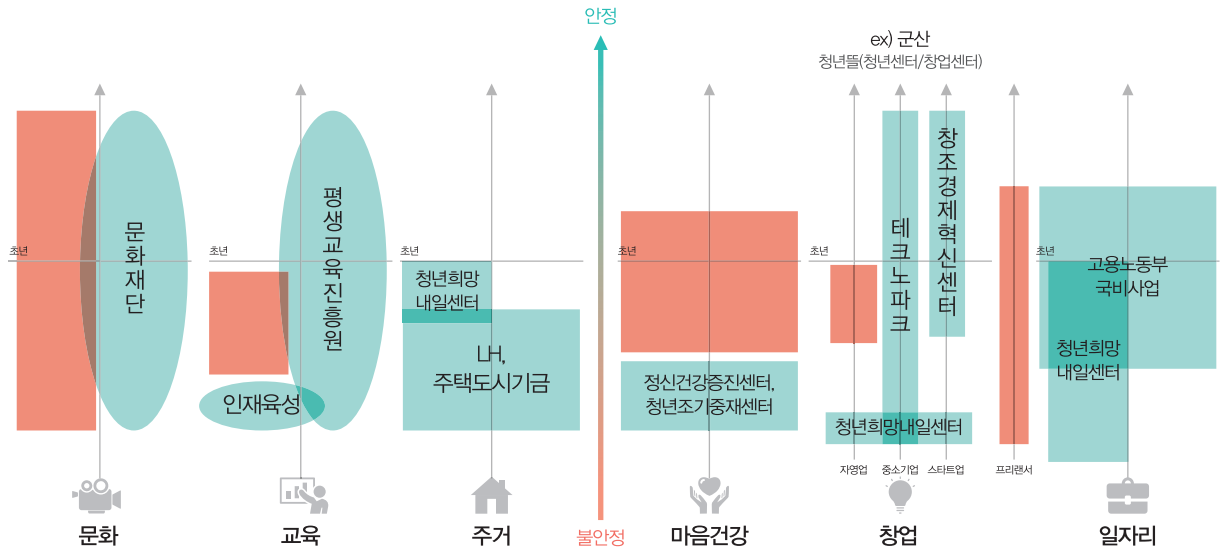
희망근무자-취업지역간 일치도 37.4% 전국 최하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DB - 고용보험 DB 연계 주 : 지역 분류불능 제외

- 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대부분(90%)가 외부에서 유입된 신생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세대는 직장, 학업, 주거환경에 따라 다른 세대보다 변동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종의 경우 그 특징이 보다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에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 2) 과반이 넘는(51%)의 청년이 외부에서 문화생활을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문제 '청년노잼도시'라는 타이틀은 위 통계에서 절실히 보여준다. 다양한 요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들은 관외에서 여가생활을 즐긴다.
- 3) 정주여건의 취약
 (주거여건) 주거 가격, 매매가격, 토지가격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도시이지만 수도권에 근접한 주거가격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초년생들은 사실 좋은 집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일자리 근무 여건) 희망근무자-취업지역간 일치도가 전국에서 최저이다. 세종에서 일하고 싶지만 63%에 달하는 청년이 원하는 지역(세종)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여건까지 부족하다.

두 번째, 청년지원관련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청년지원관련 유관기관들이 많은데 지역내 같은 가치를 목표로 하면서 따로 놓고 있지는 않은지, 제도권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대상들이 있는지 지역 지원체계를 분석해 보았다.



유관기관 포지셔닝 맵(빨간부분이 청년센터에서 역할 수행이 필요한 영역)

위표는 세종의 케이스를 분석하기 위해 고안한 포지셔닝 맵핑 도구이며, 대상자별, 분야별 세분화가 가능하다.

세종은 약 40만 명 인구의 단층제 구조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인구대비 많은 전문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기관은 어떤 특정 세대에 집중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있는 세대로서 비교적 상황과 환경,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에 발생하는 분야별 전문기관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연결하는 역할을 청년센터에서 수행해야 한다. 2022년 올해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위와 같은 부분의 세밀한 분석과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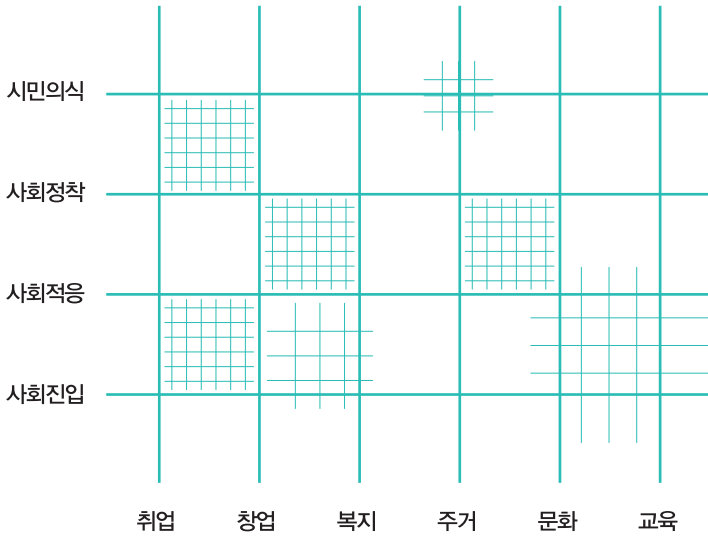
세 번째,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청년을 목표로 하는

선순환체계의 지원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센터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진입, 적응, 정착, 주인의식을 가지기까지의 일련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청년센터의 사업들이 위 단계의 과정에 맞춰서 플랫폼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유관기관과 민간기관·단체와 협업하여 메우지 못하는 부분을 섬세하게 보듬어야 한다.

네 번째, 물이 새지 않도록, 안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 ·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계 조성을 해나가야 합니다.

공조체계 행복우산



더욱 촘촘하게
물이 새지 않게

청주청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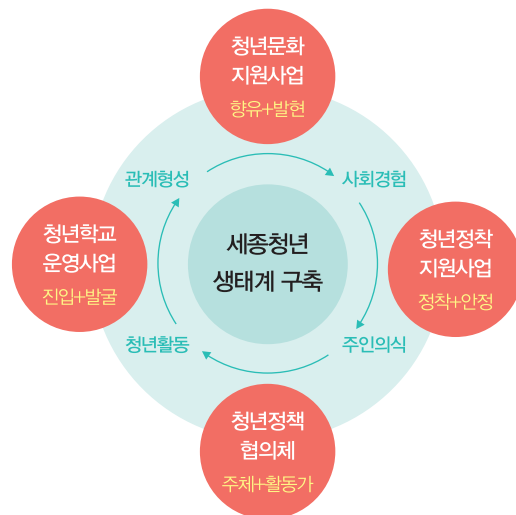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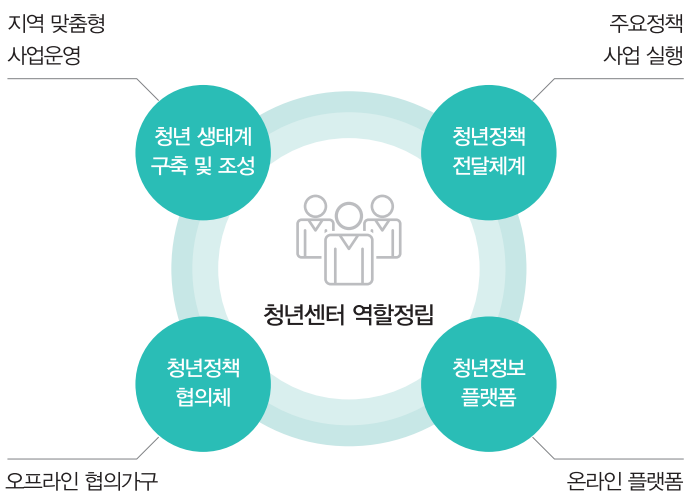
- 충북시민재단 청년기금 활용
- SK하이닉스 연계 청년주간 운영
- 롯데아울렛 청년판매공간지원
- 세스코 연계 생활환경 개선사업

대구청년센터

- 청년주간 총감독 = 청년활동가
- 청년정책네트워크 자체 운영규정
- 지역은행연계 청년부채관련 콘서트진행
- 다모디소(리모/공간당 300만, 현판, 소개)

민간기관 공조체계와 사례

지자체나 국비사업을 받아서 활용하는 기관의 단점은 행정절차와 성과에 묻혀 현장감과 세심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
이에 필요한 부분은 민 · 관의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여 메워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센터의 역할과 생태계조성사업의 방향

청년과 정책의 사이를 연결합니다

다양한 청년참여주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청년들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세종시청년기본조례 제 20조 ②항 3호)



청년정책네트워크 2기



청년정책네트워크 3기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 숙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의 전문가가 청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제안 과정의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만든 청년정책 참여거버넌스 기구이다. (이하 청정넷) 세종시 3기 청정넷 회원은 약 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근 9개월간 활동을 하며 대내외 네트워킹과 정책제안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정책제안들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2023년 정책으로 반영될 부분들이라는 성과도 있지만 동시에 숙제도 많이 남겼다.

청정넷의 참여효용

‘정책제안’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만큼 활동하는 것에 대한 ‘효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금전적인 참석수당 형태로는 채울 수 없는 기회비용이 있다. 대부분의 청년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 준비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가한 청년이 없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좋은 일과 좋은 가치이니 참여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참여에 대한 효용을 찾아주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타시도의 성공사례에서 찾을 수 있었다. 경기도 시흥의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사례에서 활발한 정책제안, 주도적인 청년활동, 그뒤엔 참여자들간의 끈끈하고 밀도있는 ‘네트워킹’이 보였다. 한세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청년 공

동체로 끈끈하게 묶일 수 있었던 것이다. 해당 사례 발표자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인생 목표 중 하나였는데, 청정넷 활동을 통한 만남 덕분에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즉 잘 짜여진 정책제안과 밀도있는 숙의과정이라는 결과의 뒤에는 회원들 간의 공동체의식과 이를 통한 참여효용이 더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연결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해답은 정책제안 활동의 ‘권한부여’이다. 정책제안의 목적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제안’이라는 범주를 넓게 보고, 반영되는 과정까지를 모니터링할 권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칙지에 맞는 정책반영이 이루어질 때 제안자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 수준을 넘어, 숙의된 정책제안

청년 정책의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많다. 굳이 청정넷을 운영하지 않아도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아이디어를 얻는 공모전 성격의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를 넘어 반영될 수 있는 숙의된 형태의 정책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끼리만의 시각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전문가 자문 수준의 의견을 듣는 형식보다는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다양한 전문가집단(관련유관기관, 연구기관, 정책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실무적인 한계는 행정의 예산반영의 시기(8월)를 감안하면, 전체활동기간 3월 ~ 12월(10개월)대비 정책제안 시기가 3월 ~ 8월(6개월) 정도로 발대이후 짧은 기간안에 많은 숙의 및 제안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숙의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부분을 건너뛰거나, 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참여자들의 효용인 ‘네트워킹’ 부분이 뒤로 미뤄져서 참여자간의 네트워킹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만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실재 정책의 반영

청년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연결되어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더욱 많은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청년들 삶의 질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이를 위한 참여기구의 운영이 바람직하다. 정책제안 이후 반영되는 과정과 반영되는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취지가 사라진다면 의미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냥 일반 청년들이 모인 형태에서 대표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활동하기 어려운 그룹들은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청년문제해결의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작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대상은 청정넷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냐



는 질문인데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청정넷의 형태나 구조의 변경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례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존과 다른 방식의 형태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3기에서는 위와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구조적인 고민과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다. 청정넷 내부의 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나 정책사업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부분은 그러한 정책사업이다.

청년정책리빙랩

다양한 정책제안이 많이 있지만, 무작정 반영할 수 없는 정책제안들이 존재한다. 필요성과 계획만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실제 적용되는 부분에서의 많은 리스크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정책리빙랩은 다양한 정책제안이 있었던 과제 중 작은 규모로 실행을 해 보고, 이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과정을 보완하여 최종 정책으로 반영되게끔 하는 사업이다. 청년센터만으로 2년, 햇수로 3년이 되면서 그간에 이루어졌던 60여 건의 정책제안들 중 2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험을 해 보았다.

요리로 세대가 소통하는 '청춘테이블'



청춘테이블 오리엔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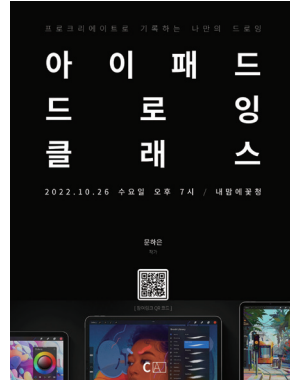


청춘테이블 팸파티

청년농부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세대와 면지역의 노인세대가 함께 요리로 소통하는 테이블이 시범 운영되었다. 위 정책은 2021년 청년정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던 과제로 '요리'라는 주제로 세대간의 소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던 사업이다. 진행은 면지역에 위치한 청년농부의 공유주방에서 이루어졌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구성되어 청년들은 도시에서 살고 노인분들은 면지역에서 많이 산다. 면지역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이 큰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 전 많

은 부분에서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고 걱정을 했던 것과 달리, 청년들은 만족을 넘어 더 많은 횟수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들이 필요했던 ‘쉼’, ‘여유’와 노인세대 어르신들이 필요한 ‘소통’이라는 부분이 만나 서로가 만족하는 결과를 낳았던 실험이었다.

청년공간이 필요해 ‘청년정거장’



민간카페를 활용한 클래스운영



민간카페에서 청년작가들의 전시회 개최

청년정거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권리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청년공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민간공간을 청년공간화하는 제안이다. 올해 ‘읍’ 지역의 고려대 인근 카페와 ‘동’ 지역의 카페 한곳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한된 예산으로 진행되었기에 다양한 실험보다는 민간공간에서 진행되는 청년정책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방식이었다. 청년센터 공간도 운영중이지만 청년들의 목소리 중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거점공간 1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효율적인 대안은 민간공간과 정책서비스간의 연결성을 지어주는 일로 가설을 세워 실험을 진행했다.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청년정책토론대회

청년정책토론대회는 2021년 진행된 아이디어 경진대회와는 달리 ‘양’보다는 ‘질’적인 수준에서 정책제안 효과성을 높이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청정넷이라는 긴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정책제안 과정도 필요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도 필요했다. 토론대회는 과정을 진행하며 점차 발전되는 정책제안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제안자 발표회 - 자문 - 8강 - 자문 - 4강 - 결승의 순으로 진행된 과정을 통해 짧은기간 수차례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우수한 제안들이 많았는데, 취지대로 잘 반영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 나가야겠다.

대회를 통해 숙의하는 '청년정책토론대회'



토론대회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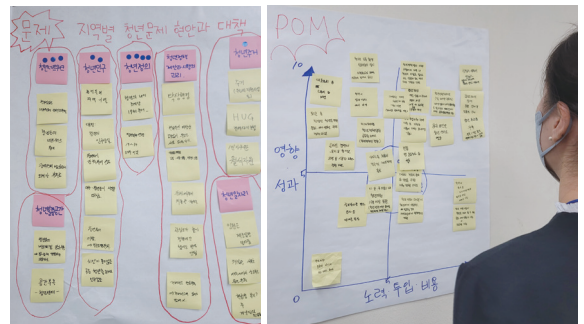
토론대회 진행

전국청년정책교류회

전국지자체에는 청년참여거버넌스가 각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다같이 모여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는 자리가 없었다. 이에 지난 10월 '세종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전국각지의 청년들이 세종으로 모였다. 같은 부분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였기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열기 또한 뜨거웠다. '세종살롱'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내년도는 다른 지역에서 이어받아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1주제로는 청년거버넌스의 역할과 기능, 2주제 지역별 청년문제의 현안과 대책, 3주제로는 전국 민·관 협치 거버넌스의 과제와 전략이라는 3가지를 다루었다. 토의와 사례발표, 자유로운 네트워킹, 2일차 세종투어 프로그램까지 전국의 청년들이 세종에서 뒤섞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전국청년정책교류회 '세종살롱'



토의 워크시트

마무리를 하며

3년차를 지나는 세종시청년센터는 오늘도 청년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청년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정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청년생태계 조성사업의 방향도 제대로 확립되도록 능숙하게, 능동적이게, 청년세대의 다양한 사이를 메우고 연결하고자 한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와 UCLG 대전트랙을 마치며

장성재 대전세종연구원 국제협력담당



UCLG총회 이사회

지난 10월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5일간 개최된 UCLG 총회는 사상 최대 규모인 145개국 576개 도시 6천여 명이 참가하고, 개최도시 이름을 딴 공식 트랙 신설, 실천적 협약을 담은 '대전선언' 채택, 회장도시 승격 등 여러 성과를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총회는 대전 시민과 세계 어디에서든 국제회의를 참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지방정부 간 연대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대전총회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UCLG·UCLG 세계총회(UCLG World Congress)·대전트랙(Daejeon Track)

UCLG란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세계지방정부연합)의 약어로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위 강화와 지방정부간의 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또한 UCLG는 전 세계 총인구의 70%인 140개국, 24만여 개의 지방정부 및 175개의 관련 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국제기구이며 UN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지방정부 및 도시 연합의 국제기구이다.

UCLG 세계총회(UCLG World Congress)는 회의의 성격을 띤 국제행사로 3년에 1번 공개 투

표를 통해 개최 도시가 선정되며 해당 행사에는 도시, 지역, 자치단체, 국제기구 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모여 공통된 국제사회 문제들에 대해 고찰·논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조직이다.

대전트랙(Daejeon Track)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내 Track(공식 프로그램)으로 기존 세계총회에서 진행되던 4개의 Track: Statutory(의사결정 회의), Assembly(지자체 회의), Town Hall(민간참여 회의), Local4action(네트워킹)과 별도로 세계에 개최도시인 대한민국 대전의 특색, 발전, 과학 및 혁신 기술들을 선보이기 위해 추가된 공식 프로그램이다. 대전트랙은 '인간과 과



UCLG총회 개막식

학', '환경과 과학', '행정과 과학'이라는 대주제로 나누어 17개의 기관들의 주관 아래 계획됐으며 우리 연구원은 그 중 '행정과 과학' 대주제 아래 「디지털혁명 시대의 '신(新) 지방자치 모델」이라는 주제로 대전세종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새마을운동중앙회, 인하대 융합보안거버넌스 센터 등 총 8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국내외 행정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 및 지방정부 행정 체제 변환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라운드테이블 세션

이달곤 국회의원의 기초발제로 시작된 「디지털혁명 시대의 '신(新) 지방자치 모델」 첫 세션인 라운드테이블 세션은 전자정보화

(Technetronic)시대 내 지방정부의 도전 과제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사회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로 사회, 경제 혁신이 주도되고 있다.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를 통해 공간과 물리적 영역이 연결됨으로써 삶의 모든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혁신의 새로운 변화는 지식 습득의 용이성, 공유경제 및 공동 공유의 가속화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은 일자리 감소, 불안정한 고용, 소득불평등 심화 등 여러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코로나19와 같이 언택트(Untact), 비대면을 강조하는 사회 변화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과정,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지방행정과 정보기관 간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며 장소의 변화, 플랫폼 기반의 지방정부, 기술개발 벤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작업장 형성 등이 정부에서부터 시작해 시민과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라운드테이블 세션 다음으로 진행된 「지방정부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세션은 디지털 혁신과 정부혁신의 비약적 선순환 연계 도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디지털 트윈 관료제(Digital Twin Bureaucracy)와 같이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관료제들이 과거의 관료제나 기존 전자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자정부 사업이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부서비스 및 내부조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부는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혁신은 행정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양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주민들의 행정적 요구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시스템만으로는 발전을 기대하거나 다양한 공동체의 문제들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세션에서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공공가치(Public Value) 창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 변화의 대응 등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행정 의사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며 단순 변화가 아닌 지방정부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한 정부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과학기술과 미래 거버넌스 모델

「과학기술과 미래 거버넌스 모델」 세션은 한국, 미국,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오늘날의 지방정부가 어떻게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지역사회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 초연결성을 강조한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로 인해 나타난 특징이며 이로 인해 신기술과 공공행정의 통합 없이는 현재의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시티를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 세계 지방 정부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시민참여와 시민주도를 이끌어야 하는 스마트시티는 조례와 정책 이념의 괴리, 규정 지향적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수집 접근방식, 사이버 보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공공서비스 지원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미래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 어떤 정책 환경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꾸준한 고찰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세션은 이러한 방면에서 정책 함의와 제안을 던지며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신기술이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지방민주주의와 정책과정 혁신

「디지털혁명 시대의 '신(新) 지방자치 모델」의 마지막 세션인 「지방 민주주의와 정책 과정 혁신」 세션은 지역 민주주의 시대로의 전환, 시민참여 확대,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권위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 민주주의는 주민의 참여와 숙의(Deliberation)에 확고히 기반을 두어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

대전트랙 기초세션



UCLG 환송 만찬





UCLG 세계총회

인 정책적 성과를 이끌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과정 내 숙의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주민뿐만이 아닌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견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세션은 새마을운동을 통한 네팔의 풀뿌리 민주주의 경험과 숙의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 공론화(Public Deliberation)의 실태와 과제를 발표하며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시민 참여적 정책과정의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마무리

도시 외교, 연대, 지속가능한 도시화 등이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지금, 여러 도시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 이번 2022 대전 UCLG 세계총회의 개최는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재 지역사회에는 신기술과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고찰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계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던 만큼 대전이 선진 사례가 돼서 앞으로 이러한 고찰과 도시 간의 교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대전예술의전당과 세종예술의전당

최대원 세종시문화재단 공연사업본부장



대전예술의전당

**2003년 10월 1일, 대전광역시 만년동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광장 개관식 행사장**

건립계획부터 거의 10여 년에 걸친 준비를 마치고 개관을 준비하는 직원들의 얼굴은 매우 상기되어 있었다. 염홍철 당시 대전광역시장, 조석준 초대관장을 비롯한 시청관계자들이 지역주요인사와 전국에서 축하차 방문한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맞이하였고 서울예술의전당 또는 다른 공연장에서 많은 경력과 경험을 쌓고 입사한 직원들과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입하는 신규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개관식과 개관 공연을 위해 준비하였다.

항상 날씨는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법이라 화창한 햇살을 기대했으나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오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다면 당연히 대안을 마련하여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하였겠으나 계속해서 내리지는 않고 조금씩 내리다 멈추기를 계속했다. 가능한 야외에서 개

막식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어 1,500여개의 의자 전체를 직원들이 2~3차례에 걸쳐 수건으로 닦아낸 후에야 개막식이 시작되었고 안타깝게도 시장님 축사를 하는 중에 다시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때 대전예술의전당의 정체성을 아직까지도 굳건하게 이어주는 멘트를 축사 중에 시장이 얘기하신다. “여러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이 비를 맞고 행사를 서둘러 마치고 공연장에 들어가서 개막공연을 관람하십시오. 이 곳은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을 담아내는 그릇인 공연장, 예술의전당입니다.”

그날 이후로 20년이 다되어가는 오늘까지 대전예술의전당에서는 시장이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거나 공연예술을 제외한 행사를 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세종예술의전당

2022년 3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 로비 개관식 행사장

2010년 건립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니 역시 10여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되었다. 대전의 개관식과는 다르게 일찌 감치 비 예보가 있어 실내로 행사장소를 옮겨서 조금 비좁지만 로비에서 개관식을 진행하였다. 개관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공연장 실내에서 행사를 하지는 주장이 없어서 다양한 형태의 축하공연과 식을 진행하였다. 1,546석과 643석 두 개의 공연장을 보유한 대전예술의전당에 비하여 1,071석 대극장 하나로 객석 수나 공연장수가 적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150만 인구의 대전과 38만 인구의 세종의 규모 차이는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당초 700석, 300석 2개의 공연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으로 소극장을 만들지 않고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이 건립되었다

는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극장의 프로그래밍을 하기에는 1개 극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향후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소극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에서는 개관을 축하하며 색다른 기획으로 앞으로 전통을 세워가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매년 세종특별자치시를 주제로 하는 창작곡을 만들자는 것이 그것이다. 첫 번째 작품으로는 황호준의 '봄을 위한 목가'와 박영란의 '세종 환타지'를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들려주었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고자 내년 개관 1주년에는 양방언 선생이 세종을 주제로 한 곡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예술의전당의 자체제작 능력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대전예술의전당 제작오페라 <토스카>는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히 역대급이었다. 무대를 비롯한 조명디자인, 연출, 출연 성악가, 합창단, 오케스트라, 연기자, 심지어 어린이 합창단까지도 어느 지역에서 만드는 오페라 못지않게, 아니 더욱 뛰어나 보였다. 올해만 안드로메다, 레떼 등 3개의 자체제작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고 한다. 대전예술의전당은 개관 후 2004년 오페라 미술피리 자체제작을 시작으로 코로나 시기 2년을 제외하고 매년 자체제작 오페라와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대전예술의전당은 20여 년의 자체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어느 공연장도 가질 수 없는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오페라와 연극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극장이야 한두 개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제작프로그램을 만드는 극장은 대전예술의전당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그러한 역량의 정점에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세종예술의전당의 유통 능력

지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작의 <정조와 햄릿> 공연은 세종예술의전당 주도로 대전연정국악원, 안동예술의전당, 경남문화예술회관, 당진문화회관 5개 공연장이 참여하는 공동유통 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특별한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 사업이 아닌 자체 협력으로 제작단체에서는 5개 극장의 유통을 통한 공연기회 확대와 경비절감 효과를 누

릴 수 있고, 각 공연장에서는 공동사업을 통한 공연료 절감 효과를 톡톡히 누린 프로그램이었다. 또한, 내년부터 이루어질 해외 공연단체의 공동 유통사업 역시 세종예술의전당 주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립예술단체 시리즈를 마련하여 국립오페라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정동극장 등이 개관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것도 공동사업을 통한 국립단체 자체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지역과 국립예술단체 유통사업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종예술의전당이 신생극장으로 가지는 제작능력의 부족함은 활발하고 효과성이 높은 유통능력으로 또 다른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라는 공통과제

대전예술의전당은 개관 초기부터 지역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스프링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다. 단순히 지역예술단체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홍보, 마케팅을 함께하여 이제는 지역 단체들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예술의전당의 경우는 개관 첫째에 공모를 통하여 5개 단체를 선발하여 '스테이지 인 세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 단체의 자체역량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공연수입은 단체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추진했다. 5개 단체 중 최종 1개의 단체는 향후 김해 등 타 지역 공연단체와의 교류사업도 진행한다.

성공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정적 예산

대전예술의전당의 성공적 운영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예산의 안정성이다. 대전 예술의전당 개관 시기와 비슷한 전국의 대형 공연장들은 현재 공연사업비 예산 상황이 좋지않은 곳이 많다. 개관 시기에 대전보다 3~4배나 공연사업비가 많았던 기관들은 지금 상당 부분 삭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에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제작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의 안정적 지원과 시의회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세종예술의전당의 경우 역시 개관 첫해에 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규공연장으로서의 인지도 안착은 잘 되어가고 있다. 극장관계자로서 극장의 예산은 어느 해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 해에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가 경영 및 기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부디 점진적이고 안정적 인 예산의 상향을 바란다.

결국은 같이 가야 할 길

과거 대전예술의전당이 생기기 전에 공연예술계에서는 대전·충청지역에는 공연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었다. 당연히 공연을 할 수 있

는 공간도 부족하고 관객층도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는 예술의전당이라는 공간이 생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덩달아서 지역예술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예술 분야이기도 하다.

세종예술의전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제대로 된 문화예술공간이 없었기에 시민들은 다른 도시의 공연장을 찾아야 했고,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욕구를 참아야 했다. 세종예술의전당 개관 이전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에 갈증을 느꼈었는지는 현재의 관객점유율과 예매 속도가 말해 준다.

대전, 세종, 충청이라는 지역은 이 계간지의 발행이 대전세종연구원이라는 것이 말해 주듯이 결국은 같은 지역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같이 나아가야 한다.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

국립세종도서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전시

김현영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자료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정책 기획전시인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정책 유관기관 네트워크인 국가정책정보협의회의 협력사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 주최했다. 전시 내용은 국내 보건복지의 100년의 역사와 성과를 조망하고, 우리 생활과 밀착된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림과 도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장애인 보조기구, 노인 돌봄 시 인형 등 현대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돌봄 기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또 온라인으로 VR전시장을 구축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전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만큼 보이고 내 삶에 도움 되는 알찬 전시를 소개한다.

2022년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공동전시

국립세종도서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공동 기획전시 「복지사회를 향한 100년의 여정」을 8월 29일(월)부터 10월 21일(금)까지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전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 100여 년의 역사를 조망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복지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한 정책 전시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해 온 보건복지의 발자취

전시는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 수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과 복지제도의 발전사에 대해 연대기순으로 구성하였다. 시대별로 달라지는 가족계획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연령별 복지의 개선, 경제와 맞물린 정책 등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정책 연구자들의 풍부한 설명과 사진자료, 실물보고서와 동영상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분야별 주요 보건복지,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정책의 힘

현재 우리사회 구성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보건복지 제도에 대해서 분야별로 소개하였다. 건강보장 주제로는 ‘이파도 걱정하지 말아요’, 소득보장 주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해요’, 사회서비스 분야는 ‘돌봄은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인구과 가족 주제는 ‘혼자여도 여럿이어도 좋아요’로 구성되었는데, 일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과 개념에 대해 도표와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전시에서는 정책 현안과 함께 거시적인 시각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수준과 환경변화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흥미로운 통계도 전시하였다.

재미있게 만나는 복지정책 체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이번 전시의 백미였다. 장애인 보조기구, 노인돌봄 AI인형, 전동킥보드 휠체어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돌봄의 도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또한 70~80년대 가족계획 포스터를 활용한 우리 가족의 표어 완성, 복지 주요상식에 대한 퀴즈풀이, 미래정책 제안 코너, 인터랙티브 디지털 체험활동도 마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복지제도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0 YEARS OF

JOURNEY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도서관은 대면 관람이 어려운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장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재현한 VR 전시장을 구축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누구나 실감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의 전시컬렉션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의 각 섹션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는 해설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에 탑재하였는데,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 도슨트의 설명을 듣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해설영상은 국립세종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국가정책정보협의회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기관인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정책 특화도서관으로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수립과정에 필요한 양질의 정책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하여 최신 정책정보의 허브 기관이자 정책정보 협력망의 구심체로서 정책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공직자와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전시는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정보 협력망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복지 제도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달려온 정책적 노력들과 가치가 널리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보유하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로서 현재 260개 정책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DAEJEON

연구원
이모저모

연 구 원 N E W S

2022 도시 '미래비전 수립'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제2회 특별 콜로키움



대전세종연구원은 9월 7일(수) 제2회 특별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올해 수행 중인 연구 상황을 공유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도시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대전광역시 리포지셔닝 전략(정경석 혁신공간연구실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이슈와 향후 발전 방향(김성표 책임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제2세션에서는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 및 전략 수립 방향(김태호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과 상생협력기반의 대전·세종 지역안전수준과 시민안전체감도 제고방안(안용준 세종연구실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과정이 진행되었다.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대전세종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1일(수)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정과제 지방시대와 지역주도 균형발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진, 김필 박사), 지방민주주의 차원에서 풀뿌리 주민자치의 법제도적 방향성 모색(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박사), 주민 참여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경기연구원 최준규 박사)에 대한 주제발표와 곽현근 교수(대전대학교), 하경환 단장(전 행정안전부), 김수현 주무관(부천시청), 안현찬 박사(서울연구원), 김정욱 교수(서울시립대), 김종동 팀장(경기마을센터), 오병철 회장(안산일동자치회) 및 3개 연구원 참석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했다.

스마트 기술로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세미나 개최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는 10월 14일(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술로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도시 조성사례(신상영 서울연구원), 플랫폼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치기반 재난대응 솔루션 및 재난통합플랫폼 구축 사례(김유혁 ㈜온폼)에 대한 주제발표와 홍정욱(좌장/한국과학기술원), 송양호(사회/대전세종연구원), 박창열(제주연구원), 윤영배(울산연구원), 하경준(경남연구원), 조성(충남연구원) 님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2022 UCLG 총회 대전트랙 세션 개최



10월 14일(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정책학회, KDI국제정책대학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공동으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에서 대전트랙 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달곤 국회 의원의 기조발표로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고규창 UN거버넌스센터 원장, 이시철 경북대 부총장(사회) 님의 4차산업혁명기술과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세 개의 세션에서 지방정부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과 미래 거버넌스 모델, 지방민주주의와 정책과정 혁신을 주제로 많은 전문가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을 토론하였다.

제9대 정재근 원장 퇴임식



10월 26일(수) 연구원 1층 로비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연구원 제9대 정재근 원장님의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정재근' 삼행시와 함께 직원들과 보냈던 유머러스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지난 임기 동안 문지동 독립청사로의 이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온택트 환경 조성, 지역학 연구거점 마련 외에도 신뢰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연구원이 되도록 공정한 직장문화 세우기와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열정적으로 일한 성과가 담겨 있었다. 경영평가 지표개선에 앞장선 연구 행정 혁신과 UCLG 총회와 같은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위상을 올리는데 애써온 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체 직원들과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새로이 출발하는 원장님 부부를 배웅하였다.

제1회(통합 24회) 젠더 콜로키움



여성 및 가족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10월 30일 '청년×여성×지역: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의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제1회(통합 24회) 젠더 콜로키움을 열었다. 군산에서 '지역'과 '여성'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발굴하다(김나은 우만컴퍼니 대표), 금산으로 온 '청년 여성', 지역에서 청년이 잘 살 수 있을까?(이경은 금산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팀장)의 발표후 충북대학교 <BIGWAVE>와 <우레>, 공주대학교 <공갈단>, 충북대학교 <보구여관> 동아리 대학생들과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공동체 활동의 지속과 연결, 확산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만들기 세미나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는 11월 8일(화)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하나컨벤션홀에서 시민 참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광역시를 만들고자 하는 담론의 장으로 대전광역시청, 대전경찰청,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대전대학교가 후원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만들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역안전지수 인식 지표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수와 인구 만 명당 자율방범대원 수가 포함되면서 관련 정책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도시안전활동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과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 대전광역시 공무원,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자율방범대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담당 경찰관, 자율방범대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자, 대학생, 시민, 지역언론사 등이 참여하였다.

2022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대전·세종 정책엑스포가 지난 11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2일 간 대전세종연구원 ICT 커뮤니티홀, 대회의실, 멀티미디어실에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코로나이후 3년 만에 직접 마주앉아 소통하는 공론의 장으로 준비한 이번 정책엑스포는 '대전과 세종의 일류를 꿈꾸다, 미래를 그리다'라는 대주제 아래 경제, 과학, 행정, 도시발전,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일류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방향과 과제, 국제과학도시 대전의 미래를 꿈꾸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 도시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청년들 등 1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지역의 아젠다를 고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정책엑스포를 통해 두 도시의 미래발전을 이끌어가는 정책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2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제3차 성인지 정책 포럼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11월 18일(금) 대전세종연구원 ICT 커뮤니티홀에서 '대전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인가?'를 주제로 제3차 성인지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최인이(충남대학교 교수), 백운순(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이경림(대전광역시일센터 부센터장), 박상철(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 홍춘기(대전노동권익센터장), 엄숙희(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국장), 김재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팀장), 김민성(청년유니온 대전지부 위원장) 님이 참석하여 민선8기의 성평등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여성 일자리 · 성평등한 노동환경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전지역 내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안전 · 폭력, 가족 · 돌봄, 일자리 · 성평등가치 확산 분야의 종사자 및 활동가와 함께 지역내 중요 이슈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회 대전 원도심 창업학교 개최



11월 5일(토)과 17일(목), 18일(금), 19일(토) 동구 중동에 위치한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 다목적강당에서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제2회 대전 원도심창업학교가 열렸다.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기제출된 사업계획의 고도화를 위한 사전 검토와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사전컨설팅이 먼저 있었다. 첫날, 목요일에 대전시청 도시재생과,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협력기관, 원도심창업학교 참가자, 기초강연자 및 창업학교 마스터 등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었다. 기초강연,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 그룹워크숍에서 한의약특화거리, 인쇄거리 원도심 빈점포를 탐방하여 매칭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로컬크리에이터와의 토크콘서트, 사업계획서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그룹워크숍이 진행되었고 3일차에는 개별적인 공개 발표회를 통한 성과 공유회 및 시상식이 있었다.

2022년도 하반기 혁신공간분과 대전세종상생포럼 개최



10월 28일(금) 대전세종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상생협력연구단 혁신공간분과의 대전세종상생포럼이 열렸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책 아젠다 발굴과 적실성 높은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전세종상생포럼은 “새 정부의 출범과 대전 세종 도시·교통 연계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경석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대전·세종 연계 발전 방향”과 이범구 박사(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충청권 광역교통 현황 및 개선방안-대전·세종·청주를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 발표후 토론이 진행되었다.

202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결과공유회



11월 25일(금) 연구원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2022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결과공유회가 열렸다. 대전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정책과 사업, 또는 젠더 이슈 관련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는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201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년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니터링 이슈를 발굴하고 방법을 모색해오고 있다. 올해 제8대 대전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여 젠더 이슈를 환기시키는 결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확대,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도시공감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
공동기획세미나



11월 29일(화) 연구원 멀티미디어실에서 <코로나19 엔데믹, 대전경제 이대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연구원과 도시공감연구소와의 공동기획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대전경제의 동향 및 평가”(박의성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와 “코로나 및 4차산업시대 고용패러다임 변화와 대전·세종지역 일자리 정책방향”(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 후 김태명(한남대학교 명예교수), 구범림(대전시장상인회 회장), 김재홍(대전경제살리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송인석(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기희(선임연구위원), 이준건(사)대전학연구회 상임이사) 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성공,
총청권 개최 확정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총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유력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치고 '스포츠 빅4' 이벤트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벨기에 브뤼셀 총회 현장에 총청권 공동유치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석하여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개최도시 협약을 맺고 돌아온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지해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와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개최하게 된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전·충청권
공동 개최
확정!**

 대전광역시

NEWS

편집위원

위원장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미래기획실장)

위원 박근수 (배재대학교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은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규(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상현(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성은(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영식(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송양호(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변성수(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83호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유성, 바00013

주소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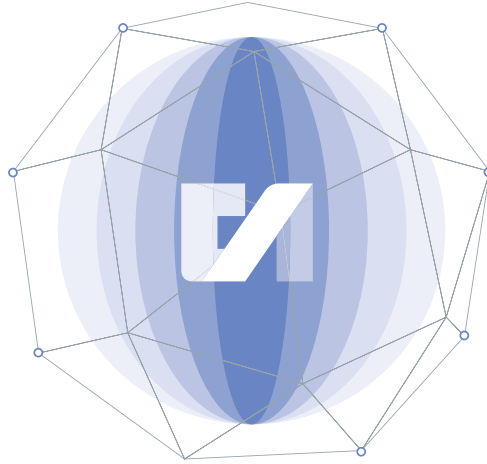
제작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연구과제 제안 안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